

제332회 국회
(임시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국회사무처

2015년4월13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 1. 정치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 비교섭단체(정의당) 대표발언 1
- 1. 정치에 관한 질문 6

(11시05분 개의)

○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장대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대표발의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미 의원 대표발의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보호수용법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원욱 의원 등 52인으로부터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 안민석 의원 등 87인으로부터 일본의 독도 도발 중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기획재정부 소관 201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정의화 수고했습니다.

○ 비교섭단체(정의당) 대표발언

(11시06분)

○의장 정의화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김기춘 10만 달러, 이병기, 이완구’, 고 성완중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을 끊으며 남겨 놓은 리스트입니다.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현직 국무총리, 현직 경남도지사, 인천시장, 부산시장, 전직 집권당의 사무총장, 권력의 몸통이 통째로 연루된 충격적인 부패 스캔들에 우리 국민들은 도무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던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솔단지는 깨졌고 배는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결연함으로 부패와의 단절을 입증하는 일뿐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검찰에게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다 해먹지 않았겠어? 빙산의 일각일 거야.’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살아 있는 권력한테 검찰이 칼을 댄다? 이 말을 혹시라도 믿는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게 듣고 싶은 말은 ‘성역 없는 수사’라는 상투적인 언사가 아니라 스스로 성역 밖으로 걸어 나오겠다는 처절한 참회의 모습일 겁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측근과 권력 실세의 비리에 관한 것입니다. 또 2007년 새누리당 대선 경선과 2012년 대선자금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건건이 청와대 수사 가이드라인에 간혀 있던 검찰이 청와대 비서실장과 여권 실세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고 성완중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발언으로 시작된 하명 수사였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성완중 회장의 비리를 덮으려는 시도도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렇듯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낸들 우리 국민이 수긍하겠습니까? 이 사건을 검찰에게 맡기는 것은 또한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명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예가 걸린 사안입니다. 엄정한 수사로 부패의 뿌리를 들어내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권은 그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또 이번에도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진실을 호도하고 정의가 유린되는 사태를 허용한다면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정치 불신으로 공멸의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촉구합니다.

상설특검법은 이런 사건을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조속히 특검 도입에 나서야 합니다.

특검의 최종 지명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조건 없이 수용해서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특검은 국민 의혹 해소 차원에서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과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최대 현안입니다.

지난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양당 대표들은 합의의 정치권을 제안하고 특권 경제 폐지를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양당 대표 모두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모든 것에 앞서 바로 이 자리, 우리 정치가 최우선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우리 국회의원들을 특권 세력이라고 합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 밥그릇만 챙긴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7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과 600만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목소리, 이 국회의사당에서 누가 대변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잃어 버린 청년들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영을 넘어선 합의의 정치가 야합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것이 되려면 합의정치 이전에 대의정치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권 경제 끝내려면 오랜 정경유착의 역사와 함께한 특권 정치 체제부터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는 이번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치의 변화와 혁신 의지를 제대로 보여 줘야 합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들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주권의 기본 원리인 표의 등가성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지역·세대·계층·직능의 대표성은 온전히 보장하고 있는지 또 민주주의의 본령인 정당정치는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 따져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제도는 절반 가까운 사표를 발생시켜 유권자들의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왔습니다.

13대 총선부터 19대까지 일곱 번의 총선을 살펴보니 사표는 평균적으로 1020만 표로 유효표 987만 표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런 사표 발생은 정당의 지지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심화시켜 투표민심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의 경우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43%였습니다. 그런데 의석수는 51%로 24석을 더 얻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18석을 더 얻었습니다. 반면에 진보정당은 정당지지율에 비해 17석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양원제 또는 최소 지역구 대비 2 대 1 이상의 비례대표제를 혼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도 선진화해야 합니다. 이제 구부러진 선거제도 바로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민심이 왜곡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정수를 360석으로 확대하고 지역과 비례의석수 배분을 240 대 120으로 주장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과 중앙선관위원회의 선거법 개정 제안을 책임 있게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많은 의원님들의 걱정대로 현재의 농촌지역 국회의원 수는 대폭 줄게 됩니다. 저는 농촌지역의 대표성이 지금보다 더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선거구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도 비례대표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가 OECD 평균 절반 수준임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특권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위해서는 국회 문턱이 대폭 낮아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권 축소하고 국회의원 정수 확대, 불가피합니다. 정치 불신 뒤에 숨죽이지 마시고 대의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정치 개혁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선거법 개정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권이 뼈를 깎는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정치 혁신의 요구가 높아질 때마다 여야는 앞다퉈서 특권 내려놓기, 세비 삭감을 천명해 왔습니다. 그 약속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급한 대로 쏟아 놓고 용두사미로 끝맺는 정치는 불신을 더욱 심화시켜 왔습니다. 자기 살 도려내듯 기득권을 내려놓는 진실된 모습, 그것을 보고 싶은 것이 우리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합니다.

세비 삭감, 특권 축소를 실천하기 위해서 적정 세비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새누리당은 며칠 전 오픈 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께서는 정당민주주의의 시작은 공천권 행사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야당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정당민주

주의를 실현하기로 뜻을 같이했다며 한껏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나 김무성 대표께서는 정당민주주의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당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국민께서는 지금까지 정당이 공천을 똑바로 하라고 했지 공천권을 달라고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좋은 후보를 공천해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정당의 고유한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서 공천 개혁을 이루는 대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책임정치와 거리가 멉니다.

더구나 오픈 프라이머리는 자금과 조직력을 가진 명망가, 중진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로서 참신한 정치 신인에게는 거대한 장벽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사실상 선거를 두 번 치르는 것입니다. 정당이 할 일을 국민에게 미루면서 중복 선거에 400억이 넘는 혈세를 쓰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각 당이 자율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면 굳이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법제화해서 모든 정당에게 강제시키는 것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얼마 전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께서는 의원정수를 400석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신 바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문재인 대표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의 많은 의원님들의 뜻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일구었던 세력입니다. 그 어느 정당보다 철차적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나가야 할 역사적 사명감을 가진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반석에 올려놓는 일을 두고 여론 앞에 머뭇거리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앞장서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에 대한 빠른 당론 결정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민에게 복지를! 부자에게 세금을!’ 이 슬로건을 기억하십니까? 10년 전 반세기 만에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입하면서 내걸었던 슬로건입니다. 복지 불모지였던 시절이었음에도 당시 정치권에

서는 복지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세였습니다. 진보정당은 그동안 보수 일색의 한국 정치에서 금기시되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 노동과 생태의 가치를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정치의 중심의제로 만들어 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복지증세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역설해 왔습니다. 증세를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정부 여당, 복지국가를 말하지만 여론을 의식해 복지증세에 침묵하는 제1야당, 솔직히 외롭고 고달프기도 했습니다만 이 길이 국민을 위한 길이고 시대적 사명이라는 자세로 뚜벅뚜벅 걸어 왔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복지국가를 향한 정치권의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딱 10년 걸렸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중부담·중복지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여야 공동의 목표로 하자는 저의 제안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환영합니다. 세금과 복지에 대한 정당 간의 컨센서스가 형성된 만큼 4월 회기 중에 국회 내 논의기구 설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소득주도 경제론은 성장의 해법에 한계가 있다는 여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도 성장을 위한 미래산업 전략을 구상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성장을 위해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될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장도 시대정신을 먹고삽니다.

시대에 부합하는 가치혁신 없이 미래의 성장비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자동차산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세계적인 친환경자동차 개발경쟁에서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에 뒤처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미래 자동차시장은 저탄소, 연비 경쟁인데 혁신을 거부하고 눈앞의 이익을 좇은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내외 자동차업계의 로비에 굴복해서 저탄소협력금제도의 유예를 선언했습니다. 환경이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곧 경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미래성장을 주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 하청기업을 쥐어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기업 소원수리용 규제개혁은 낡은 성장주

의의 유산입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 뿐입니다. 개혁이 기업의 비용절감 차원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의 소득과 참여의 관점에서 추진되고 또 인간의 존엄성과 생태적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혁신이 전제될 때 비로소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의 전망을 열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저성장시대, 특히 양극화가 심화된 오늘의 한국에서는 소득주도 경제야말로 저성장의 늪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가장 중심전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소멸된 상황에서 복지확대, 임금인상을 통해 아래로부터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는 정책이 절실한 것입니다. 산에 오를 때 쓰는 근육과 내려올 때 쓰는 근육이 다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저임금 해소를 넘어 새로운 구매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노동소득 증가율이 1% 증가하면 GDP 1%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중소기업과 골목시장을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해서 서민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 플랜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부의 특단의 대책과 병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카드수수료 인하,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절감 및 세제혜택 그리고 원·하청 불공정 거래개선과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부담을 낮추는 등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5대 지원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주도 경제의 필요성을 말로만 인정하지 말고 정의당의 제안을 진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제안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는 현재 법적으로 보장되는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에 크게 미달할 뿐만 아니라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추동하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제가 아니라 시중노임단가 전면 적용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친문학적인 국익손실이 예고된 두 가지 현안에 대해 정치권의 책임을 촉구합니다.

정부의 정책실패, 도덕적 해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 없이 재정이 부족하니 복지 긴축하자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두 가지 현안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정파탄 예고된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작년 인천 아시안게임은 무려 1조 8700억 원의 빚더미를 인천시에 안겼습니다. 인천시는 부채탕감을 위해서 2015년 보육·노인 사회복지예산을 삭감하고 2029년까지 매년 1336억 원의 부채를 갚아야 합니다. 지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한창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의 예산은 2011년 8조 8000억 원에서 4년이 지난 2015년에 13조 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물가상승과 설계변경을 고려하면 사업비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2014년 말 현재 경기도…… 죄송합니다.

2014년 말 현재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를 포함한 강원도의 부채는 1조 5600억 원입니다. 2018년이면 강원도의 부채는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강원도 도민 1인당 130여 만 원에 달하는 빚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면 동계올림픽이 과연 무엇을 남기게 될 것인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따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은 50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10억 달러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IOC는 지난 12월에 ‘올림픽 어젠다 2020’을 통해서 개최국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환경파괴를 줄이기 위해서 올림픽 분산화를 거론하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시간이 없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분산 개최를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담당 공무원들은 분산 개최를 검토하고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설설 기고 있습니다.

또 지역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은 낙선되다 는 통념에 갇힌 정치는 강원도의 재정파탄, 민생 파탄이 한 눈에 보임에도 국익을 따지지 않고 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는 경기장을 새롭게 건설하는 대신에 리모델링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 원시림 가리왕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4개 경기종목만 분산 개최하면 경기장 건설비용으로 40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도로와 부대시설까지 포함하면 비용절감효과는 1조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호소드립니다.

국회가 책임을 다해서 평창 올림픽 분산 개최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조 1328억 론스타 소송 대책을 묻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후인 5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국 정부와 론스타가 투자자·국가 소송이 맞붙는 세기의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직후 들어와서 2012년 외환은행 매각 시기까지 4조 6000억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하고 차별적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를 통해 확인한바,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청구한 금액은 5조 1328억에 달합니다.

제가 확보한 론스타 소송 관련 자료에 의하면 한덕수, 전광우, 김석동 등 전임 고위 경제 관료들이 워싱턴 중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세 가지 요청드립니다.

지난해 9월경 론스타가 청와대에 소송가액보다 낮은 두 가지 협상안을 비공개로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론스타 벨기에 법인은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대부분의 투자보호협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는 혜택의 부인조항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발효된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에는 페이퍼 컴퍼니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 이 혜택의 부인조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워싱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론스타에게 유리한 조항이 포함되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론스타가 ISD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떠한 추가 협상도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히 국익에 반하는 협상이었습니다.

저는 2007년부터 한미 FTA ISD 조항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그 폐기를 제기해 왔습니다. 론스타가 ISD 소송을 거론하는 상황에서는 페이퍼 컴퍼니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새누리당 정권하에서 왜 이런 매국적인 협상이 이루어졌는지 당시 협상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조 1328억 원이면 경상남도가 아이들 무상급식을 80년 동안이나 할 수 있는 큰돈입니다. 정부는 이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해외의 투기자본에 빠져나가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그 대책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결코 잊을 수도 없고, 잊혀져서도 안 되는 4월 16일입니다.

모두가 세월호 이전과 이후에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고 외쳤지만 멍골수도, 그 바닷속에는 아직도 9명의 국민이 있습니다. 오늘도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삭발을 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4월 16일까지 세월호 특별법 취지에 어긋난 시행령을 철회하고 세월호 인양을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심상정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정치에 관한 질문

(11시34분)

○의장 정의화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두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열 분의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대정부질문의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5분입니다. 그리고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지 않으셔도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 대상 국무위원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제7차 세계물포럼 행사 참석 관계로 차관이 대리 출석하도록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서 의장이 승인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먼저 서울 강서을 출신의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성태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김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지난 9일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무거운 애도의 말씀으로 오늘 대정부질문 첫날 첫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망자의 한에 정치권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가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저부터 반성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까지 진행해 온 자원개발 비리 수사의 배경에 혹시라도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모종의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고, 저희들이 다양하게 내사를 하는 가운데 범죄 혐의가 포착된 사안들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본 의원은 검찰의 의도와 다르게 수사 진행 과정에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고인이 밝힌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에 국민적인 관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고인은 정치와 깊이 관련을 맺어 왔던 기업가로서, 사업가로서 오랜 기간 정치권 주변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활발하게 교류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인의 행적을 살펴보면 사업의 고비 고비마다 정치권과의 유착을 통해 어려움을 넘긴 정황을 솔하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인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나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언론을 통해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2005년 5월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고인은 비교적 중형 선고였음에도 항소를 포기해서 형이 확정되었고 불과 10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또한 2년 뒤인 2007년 11월에도 고인은 이른바 행담도 게이트 사건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상고를 포기했고 불과 한 달여 뒤인 12월 31

일에 그것도 비공개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두 번 모두 형평성 시비가 크게 불거졌던 매우 이례적인 특별사면이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께서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또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각각 계실 때 있었던 특별사면인 만큼 그 내용을 소상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자수성가했던 고인이 사업을 일으키고 키워 나가는 과정에는 늘 정치권 특혜 시비가 따라다녔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장관님.

실형까지 받은 사람이 한 정부에서 두 번씩이나 대통령 사면을 받았다면 이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잘 없는 일입니다.

○**김성태 의원** 이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동안?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가 전수조사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사면이 거듭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김성태 의원** 경남기업은 2006년 마다가스카르 니켈광 개발사업, 2007년 아제르바이잔 해상광구 투자사업 등 지금 실패로 드러나고 있는 자원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당시에 참여정부는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자원외교의 성공 사례라고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경남기업은 또 2006년 알제리 대규모 신도시 건설사업과 2007년 진주 혁신도시 건설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고인은 어려움이 닥치면 정치권 간의 결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막대한 불법 정치자금의 오고 갔으리라고 누구나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검찰이 이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고인의 마지막 전화 통화, 혹은 메모에 담긴 내용만으로 수사 대상을 국한할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통화내역이나 비자금 장부, 그 밖에 수상한 거래에 대해서까지도 수사 범위를 넓혀서 의혹의 전모를 명백하게 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의혹의 당사자들 역시 검찰의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자원개발 비리와 금품수수 의혹 모두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서로 본질이 별개인 두 수사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고 왜곡되거나 변질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검찰은 어떠한 정치적 부담도 전혀 고려하지 말고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성역 없이 철저히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완중 전 회장의 행적 그리고 주변 관계자들의 자료를 모두 복원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정치권 전반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를 뿌리째 뽑아야 한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황교안**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최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이 사건의 진실이 빠짐없이 규명될 수 있도록, 정의롭고 철저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팀워크를 갖췄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장관님 입장에서는 장관직과 그리고 검찰총장의 직을 걸고 만일 이번 수사가 미비해서 특검 수사에 가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다면 장관과 검찰총장은 즉각 그 자리에서 옷을 벗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황교안** 의원님 걱정에 공감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검찰을 지도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이번 사건은 이른바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망라된 사건인 만큼 자칫 이 사건을 빌미로 국정 운영이 좌초될 위험에 봉착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치적 비중과 파장이 워낙 크고 무겁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라고 검찰에 주문하셨지만 정부나 새누리당 역시 결코 이번 사건을 피해 가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권 차원에서 정면승부를 걸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혹을 밝혀내지 않고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가져가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그 누구도 성역으로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검찰 수사로 모든 실체가 낱알이 드러난다면 측근이든 나발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당연히 그에 따른 정치적·법적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야당에도 촉구합니다.

이번 사건을 부풀려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략적 접근은 자제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면 국가적으로 더 큰 불행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고 수권 정당에 걸맞은 도리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이 불행한 사건을 두고 여야가 서로 정치적으로 비방하고 공세를 퍼부을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기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할 때입니다.

소모적인 정쟁과 지지부진한 절차로 허비할 시간이 없지 않겠습니까? 특검이든 특별수사팀이든 가장 신속하고 철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떠한 정치적 야합도 단호하게 근절하겠다는 여야 원내 지도부의 과감한 정치적 결단과 합의를 촉구합니다.

장관님 들어가시고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총리님, 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성완중 전 회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검찰은 물론 정치권에까지 후폭풍이 불어 닥치고 있는데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심정이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김성태 의원 총리님, 충청포럼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성 전 회장이 지난 2000년에 만 들었고 회원 수만 3500명에 달하는 이 포럼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충청 출신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왕성하게 교류하고 활동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는데, 총리께서도 회원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충청포럼은 2000년 말씀하신 대로 고인께서, 여야를 떠나 정치권과 언론인들이 주축이 된 충청권 중심의 하나의 포럼입니다만 저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기업 하시는 분이 주도하는 그러한 포럼에 제가 그때 16대 국회의원 신분이었습니다마는 정치인이 가입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김성태 의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과거 총리가 충남도지사 시절 이 경남기업이 당시 도지사였던 총리를 상대로 소송을 했었다는데 도대체 그 내용이 무슨 얘기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고인의 고향인 안면도 개발권을 둘러싸고 한 수조 원대의 개발권 문제를 놓고 충청남도과 고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경남기업과 송사의 건입니다. 2007년 1월에 시작해서 2008년 11월에 2심까지 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경남기업이 충청남도에 패소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김성태 의원 그러면 고인 측은 그 소송으로 인해서 총리께서 고인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는데 사실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썽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도지사 신분이었고 고인은 경남기업의 오너 신분이었으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도와 2년 동안 좀 아주 심하게 소송이 진행이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성태 의원 한 가지 더 여쭙 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총선과 그 해 12월 대선 당시 이완구 총리께서는 당시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셨습니까? 상당히 기여를 했으니까 지금 총리를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기여를, 이 정부에 기여를 했던 말씀입니까?

○김성태 의원 아니, 하여튼 그때 4월 총선하고 12월 대선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었느냐고요.

○국무총리 이완구 2012년 1월 10여 일경에 저는 보도가 된 대로 혈액암으로 해서 1월 초순경에 병원에 입원을 해 가지고 그해 말까지 투병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2년 4월 총선에 출마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대선에도 관여하지를 못했던 것…… 1년 동안 투병생활을 했습니다.

○김성태 의원 고인이 숨지기 전 날 ‘이완구, 완구가, 이완구가……’ 이렇게 총리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무척이나 섭섭해 했는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아, 제가……

○김성태 의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김성태 의원 이유가 있을 건데, 명확하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글썽요, 고인이 되신 분의 생

각을 경솔하게 짐작한다는 것이 대단히 곤혹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총리에 취임하고 나서 3월 12일 날 사회기장 확립 차원에서 담화가 발표됐고 3월 18일 검찰이 경남기업에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3월 22일경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고인으로부터 처음이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이후에 처음이자 마지막인 전화를 받은 것 같은데……

○**김성태 의원** 그러니까 지난 3월 18일 경남기업 압수수색 이후에 성 전 회장이 총리에게 구명운동을 벌인 사실은 있네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22일 날 전화를 주셔서 여러 가지 억울한 점을 말씀을 주시길래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 현재 국정 운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고 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으면 검찰에 가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그러니까 지난 3월 22일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만난 사실은 혹시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 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만난 적도 없고 그 후로 전화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김성태 의원** 오늘 아침 조간을 통해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총리께서 태안군의회 이용희 부의장과 김진권 전 의장에게 각각 열두 차례와 세 차례씩, 모두 열다섯 차례 전화를 걸어서 성 전 회장과 나눈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 캐물었다는데, 왜 캐물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돌아가시고 난 후에 모 언론에서 태안군의 회 의회 의장님이신 이용희 의장님께서 “이완구를, 이완구를……”이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그 보도를 보고…… 제가 도지사 할 때…… 이용희 군 의장님은 아주 가깝습니다, 제가 도지사 시절에 그분은 군 의회 의장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천만 국민들께서 대단히 곤혹스럽고 혼돈된 이 상태에서 총리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좀 그렇다. 그러니 도대체 어떠한 내용인지…… 제가 아마 친분이 없었으면 전화를 못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친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고 또 그 어른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별하기 때문에 전화를 올려서 이 진위를 가리는 것이 맞다……

오히려 그러한 보도를 보고 저하고 친분이 있는 분에게 전화를 안 드리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서너 차례 드린 적이 있고, 그분 답변은 “동향인데, 같은 동향으로서 이번 사건에, 총리 담화 이후에 경남기업에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해서 굉장히 섭섭해 한다. 총리가 안 도와준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다.” 하면서 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리 입장이라든가 또 국정 운영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총리가 검찰 수사에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과 함께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가 하는 그런 지인과 지인간의 전화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태 의원** 도지사와 또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경남기업으로부터 정치후원금 내지 별도의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지 않아도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제가 알기로 2006년 이전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금은 포괄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6년, 2007년 이후로는 저희들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도지사선거 이후 그리고 2013년, 2014년, 가까운 것을 조사해 보니까 경남기업과 고인으로부터 정치인으로서 후원금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앙선관위가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확인해도 좋습니다.

○**김성태 의원** 총리, 앞으로 이 금품수수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텐데 총리께서는 어찌 되었던 간에 고인의 메모에 지금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명정대한 수사를 위해서 앞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총리께서는 이 수사에 일절 관여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또 검찰 수사에 관계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사람과 전화 통화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의 각오와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완구** 아침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의 국민적 파급 내지는 국민적 걱정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성역 없는 수사와 함께 한 점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 자신 메모에 왜 이름이 나와 있는지 저도 이해는 가지 않

습니다만 어떤 경우라도 총리를 포함해서 그 어떤 누구도 필요하다면 또 당연히 검찰이 수사한다면 대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깊게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주민들의 복지 그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광역단체장의 과도한 정치지향성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민선 6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일부 광역단체장들의 과도한 정치지향성 때문에 불필요한 정쟁거리가 양산되는 부작용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일방적인 무상급식 중단 선언으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전국적으로 논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결코 바람직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얼마 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보육 중단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럽다고 했는데 지하철 9호선을 지옥철로 만든 본인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과연 박원순 시장 역시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리, 지난 3월 28일 날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이 개통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김성태 의원** 세상에 이 만원버스, 교통지옥 버스나 하려고…… 신속하고 정확하며 편리한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하려고 그 수조 원대의 국세 또 서울시 혈세로 지하철 만들었는데 막상 지하철 개통시켜 놓고 보니까 지하철 안에서 다녀야 될 전동차를 발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지하철 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2015년 3월까지 진행되었는데 7년 동안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은 전동차 구매 발주를 내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국고 지원 500억 요청했다가 결국 작년에 정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40억 지하철 전동차 구매 지원금으로 정부가 지원 결정을 했습니다. 그 240억 지원받으려고…… 본인은 지난 3년 동안 서울시 채무를 7조 5000억을 감축했다고 온 국민들, 서울시민들에게 자랑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정치 시장으로서 정부와 불필요한 정쟁을 일삼기 위해서 한 행위인데 언제까지 이런 정치적 행위에 서울시민들이 불안하고 또 힘든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해야 되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더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단을 유보합니다.

○**김성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마포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마포을 출신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먼저 유명을 달리하신 성완중 전 새누리당 의원님께 명복을 빌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민 여러분!

건국 이래 최악성·최대의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는 가히 매머드급 핵폭탄이라서 정권을 마치 날려 버릴 것도 같은 무서운 기세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소위 성완중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물 8명 중 박근혜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전·현직 비서실장 4명이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 시절 유정복 전 비서실장, 청와대 허태열 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현직 이병기 비서실장 그리고 지난 2007년 대선 경선과 2012년 박근혜 후보의 중요한 조직책이자 자금책들로 이 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히 단군 이래 최악의 부패 스캔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합니다.

○**정청래 의원** 그렇습니다.

비리 의혹이 있거나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어야 되겠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물론입니다.

○**정청래 의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성역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라라고 했습니다.

‘성역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검찰에서는 어떤 정치적으로도 없이 또 정당이나 소속과 관계없이 범죄를 찾아서 입증하고 그에 상응한 처분을 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완구 총리 나와 주세요.

국무총리는 성역이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청래 의원**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소환을 요청하면 소환에 응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당연합니다.

○**정청래 의원** 성완중 리스트에 ‘이완구’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적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고인의 생각을 제가 함부로 헤아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말씀입니다마는 정황으로 볼 때 또 서산 지역의—살아생전에 여러 분들 만나시고 난 후에—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태안군 이용희 군 의장님 저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말씀을 이렇게 유추해서 볼 때는 동향으로서 도와주지 않았다는 그런 섭섭함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또 3월 22일 날 제가 통화할 때 억울함을 호소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 국정을 수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억울한 점이 있거나 답답한 게 있으면 검찰에 가서 상세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에 좀 섭섭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청래 의원** 성 회장으로부터 단돈 1만 원도 안 받았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런 것 없습니다.

○**정청래 의원** 하늘에 맹세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후원금 한 푼 안 받았습니다.

○**정청래 의원**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태안군 군 의원들에게 열다섯 번씩이나 전화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중앙일보에 태안군

군 의장이신 이용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장님께서 제 얘기를 언급을 했다 해서 제가 아까 말씀대로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분이기에 때문에, 지사 할 때부터. 그래서 당연히 제가……

○**정청래 의원** 총리!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정청래 의원** 총리!

○**국무총리 이완구** 예.

○**정청래 의원** 총리는 청문회 과정 속에서도 거짓 해명으로 여러 번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대화 내용이 뭐였는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의원** 두렵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총리가 지금 말씀대로 고인께서 메모를 남겨 놓고 이름이 거기 있고 그리고 태안군 군 의장님이 저하고 친분이 있는데 그분이 제 말씀을 해 가지고 보도가 됐으니 오히려 저하고 친분이 없다면 제가 전화하는 것이 무리겠지만 저하고 친분이 있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어떠한 것을 알아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의원** 토요일 날 몇 시에 전화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 시간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하고 친분이 있기에 전화를 했습니다. 또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정청래 의원** 상식적으로 토요일 날 새벽 6시, 7시에 무려 열다섯 통씩이나 받지도 않는 전화를……

무슨 스토커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열다섯 번을 통화한 게 아니고 서너 통을 통화를 했고 나머지는 서로 엇갈려 가지고 통화가 안 된 것뿐입니다.

○**정청래 의원**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언론 외압 있었지요? 사과했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언론 외압 한 적 없습니다.

○**정청래 의원** “야, 우선 저 패널부터 막아, 인마! 빨리, 시간 없어.” 이런 말 한 적 있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정청래 의원** 이거 거짓말했다 들통 난 사항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제가 알지도 못하는 젊은 기자분들과 하는 반어법적인 그런 얘기로

한 것이지 제가……

○정청래 의원 반어법이 아니라 반말이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글썽요, 그것은 뭐 의원님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정청래 의원 자, 병역 의혹도 처음에 홍성에서 1차 신검을 받았다고 했다가 들통 났지요? 서울 육군병원에서 받은 걸로 드러났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기억에 착오는 있을지 모르지만 50년 전 엑스레이, 40년 전 엑스레이, 6년 전 엑스레이를 제가 갖고 있다는 사실은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의원 총리, 지금 청문회장에서 할 때 처럼 그런 태도가 아니군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년 전 엑스레이를 왜 보관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같은 부위를? 40년 전 엑스레이를 왜 보관하겠습니까?

○정청래 의원 그럼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청문회 때?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50년 전 엑스레이와 40년 전 엑스레이, 6년 전 엑스레이를 같이 보관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객관적 상황이지요?

○정청래 의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거짓말했다가 들통 나서 사과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문회장에서?

○국무총리 이완구 거짓말하지 않았습시다.

○정청래 의원 왜 사과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사과한 적 없습니다, 제가.

○정청래 의원 청문회 때 사과한 적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런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사과하지 않았습시다.

○정청래 의원 고개를 무려 90도로 숙이면서 여러 번 사과했고……

○국무총리 이완구 전체적인 국민 정서에 반하는 그런 의미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했다는 말씀드렸지 그러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사과한 것 아닙니다.

아니,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 요지로 보면 50년·40년·6년 전의 엑스레이를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다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의원 총리님, 당시 언론에서 ‘의혹 자판기’라고 별명 붙여 준 것 기억 안 나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그것은 언론이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언론에서 ‘자판기’라는 표현을 썼습시다마는 저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하나 저걸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자, 총리는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수사를 지휘하고 조율할 그런 위치에 있고 청와대 비서실장은 민정수석을 통해서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병기 실장과 국무총리는 일단 그 직에서 사퇴하고 조사를 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총리는 법무부장관을 직간접적으로 지휘해서 검찰 수사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리는 검찰 수사에……

○정청래 의원 그래서 직접 전화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 저는 열다섯 번씩이나 전화한 것은 외압이고 증거인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말씀드린 대로 저하고 친분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통화를 했지 제가 모르는 분 같았으면 전화할 리가 없지요.

제가 지사 때 태안군 의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건 자연스럽게…… 오히려 전화를, 본인 이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정청래 의원 법무부장관 나와 주세요.

현직 국무총리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가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일입니다.

○정청래 의원 거의 없었지요.

보통의 경우 문제가 되면 그 직에서 물러난 이후 당당하게 나는 거리낄 것이 없으니 조사를 받겠다, 이것이 국민적 상식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의원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그 어느 사안보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 현직에 있으면 수사에 특히 외압을 넣을 수 있는 위치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검찰이 자

유롭게 수사할 수 있을까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자유롭게 수사한다고 하는 것이 증거에 의한 수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직에 있다고 그래서 검찰 수사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정청래 의원** 장관께 묻겠습니다.

만약 장관이 연루된 사건이 있었고 그걸 진술한 사람이 있었다면 장관이 직접 전화했을까요? 좀 이상하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게 그런 일도 없거니와 또 상황에 따라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처신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의원** 묻겠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금 불거진 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봤을 때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됩니까,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됩니까, 아니면 내사자 신분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현재 그 메모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이 성함만 쓰여져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부분을 조사하고 상황을 판단해야 될 자료입니다.

○**정청래 의원** 장관께 묻겠습니다.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선거법을 적용하지 마라, 불구속 수사해라, 이렇게 지휘한 적 있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런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청래 의원** 자, 그런데 국정원 원세훈 원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범정구속이 됐습니다. 본인의 감상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었고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지금 3심에서, 최종심에서 재판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지난번 국정원 사건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번 부패 스캔들도 포괄적 뇌물죄는 적용하지 말고 정치자금법을 적용해라, 구속하지 말고 불구속 수사해라, 이렇게 지휘할 것 같더라는 세간의 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전혀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에 따라서 법률 검토를 거쳐서 공정하고 또 철저하게 수사하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자, 피의 혐의가 있는 자가 자신의 혐의 내용에 대해서 발뺌하고 부인하면 그냥

무죄방면합니까, 보통 검찰에서?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자체가 우선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내용입니다.

○**정청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범죄 혐의가 명백하면 그 명백한 정도에 따라서 또 불투명하면 불투명한 정도에 따라서 수사의 방법과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방금 전 이완구 총리가 인사청문회 때 한 발언조차 거부하고 부정하고 이리저리 발뺌하고 있고, 열다섯 명한테까지 전화한 사실도 얼버무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거인멸의 과정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가 있을 때 그 범죄를 숨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어떤 범죄가 있다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정청래 의원** 사전에 입 맞추고 짜 맞추고 하는 것도 증거인멸 과정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범죄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증거인멸이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청래 의원**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 몇 가지 물어볼게요.

성 회장의 핸드폰 내역 조사하겠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 압수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누구부터 부를 예정입니까? 언론에서는 홍준표 지사부터 부르겠다고 하는데……

○**법무부장관 황교안** 누구를 부를 것인가, 언제 부를 것인가 하는 것은 검찰에서 수사상황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의원** 알겠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현직 국무총리와 현직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렇게 미리 의혹으로 국민들의 의심을 사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본인은 드는 생각 있어요, 없어요?

○**국무총리 이완구** 지금 의원님께서 ‘비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남겨놓은 메모에 이름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

다. 저는……

○정청래 의원 자, 이완구…… 제가 이야기할게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정청래 의원 제가 얘기할게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주십시오. 아까……

○정청래 의원 아니, 제가 얘기한다고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답변 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 주셔야지요.

○정청래 의원 제가 얘기할게요.

○부의장 이석현 이완구 총리, 총리께서는 그것으로 우선 답변……

○국무총리 이완구 답변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정청래 의원 묻는 것에 이미 답변했어요. 그다음 질문에 답변하세요.

○부의장 이석현 마이크 안 나오나?

○국무총리 이완구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말씀하세요.

○부의장 이석현 잠깐, 총리께서는 질문을 더 들으시고 또 더 답변해 주고……

○국무총리 이완구 예,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부의장 이석현 정청래 의원은 답변을 충분히 들을 시간들을 주십시오.

○정청래 의원 총리, 이런 자세 이런 고압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총리가 기자한테도 반말하고 뭐 대학 교수시켜 준다는 둥 그런 허풍을 떠는 겁니다.

(「예의를 갖추면서 질의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태흠 의원, 김태흠 의원 말하니까 물어볼게요.

김태흠 의원, 홍문표 의원, 김종필 전 총재한테 전화 왔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런 얘기……

○정청래 의원 전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김태흠 의원한테 전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제가 충청권 의원님들한테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충청권 의원님들과 고인이 친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하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정청래 의원 그런데 언론에는 김태흠 의원, 홍문표 의원, 김종필 전 총재 3명이 이완구 총리

한테 구명을 위해서 전화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가 사실이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특정해서 제가 어느 특정인을 말씀드린 것은 없어요. 충청권에 있는 국회의원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더라 하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대정부질문을 이따위로 하고 있어!」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

○정청래 의원 자,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아까 저한테 답변 기회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제가 묻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할 말이 많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요,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정청래 의원 묻는 것에 답변하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간단한 답변 기회는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부의장 이석현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질문을 경청해 주시고, 정청래 의원도 답변할 시간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의원 이 문제가 불거지자 총리실의 첫 해명은 ‘성완중 전 회장과 이완구 총리는 19대 들어서 의정활동 1년을 같이 한 것밖에 없다. 다른 친분이 없다’ 이렇게 첫 일성으로 해명을 내놨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유인즉슨 아까 말씀하신 2000년도……

○정청래 의원 제가 질문이 아직 안 끝났어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정청래 의원 개인 정청래와 질의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국민 앞에 좀 겸손하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답변의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의원님.

○정청래 의원 겸손하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답변의 기회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청래 의원 1997년 성완중 전 의원은 신한국당 재정위원으로 활동했고 이완구 총리는 당시

신한국당 원내부총무로 신한국당 대선기획단 조직 1본부 중부권대책단장을 했다고 모 신문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몰랐습니다.

○정청래 의원 언제 일면식이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이분을 직접적으로 만난 것은 아마 제가 15대…… 16대 국회의원 말인 2003, 2004년쯤 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결성한 충청포럼에 제가 참여를 못 했지요. 제가 2004년 16대 말쯤 해서 된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 그렇게 친분이 없던 분을……

제가 기사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통합효과 역시 내년 지방선거에서 극대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선진통일당 출신인 성완중 의원을 새누리당 충남도당 위원장으로 추천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완구 총리가 이렇게 발언한 것이 나와 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을 이렇게 도당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이미 선진당과 우리 당이 합당이 되어 가지고 우리 당 의원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도당 위원장으로 모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당연히 이분을 모셔서 어떤 양당 합당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성완중 의원님께서 도당 위원장이 되시는 게 좋겠다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랬습니다.

○정청래 의원 총리,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중에 총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정확한 말씀입니다.

○정청래 의원 법무부장관 다시 나와 주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의원님 저에게 아까 말씀…… 한번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청래 의원 법무부장관 다시 나와 주세요.

(「답변 기회를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답변을 안 들을 거면 질문을 왜 해!」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 이완구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정말 안 됩니다.

(「질문하면 답변 기회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정청래 의원 법무부장관 나와 주세요.

(「언제든지 답변 기회를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답변 기회를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단 1분이면 됩니다.

○정청래 의원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1분이면 됩니다, 1분이면.

○정청래 의원 나중에 드릴게요. 나중에 2분 드릴게요.

(「답변 주세요, 답변!」 하는 의원 있음)

(「답변할 기회 주고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국무총리 이완구 아닙니다. 1분이면 됩니다.

○정청래 의원 일단 들어가세요.

○부의장 이석현 1분 답변하고 들어가시지요.

정청래 의원, 좀 양해해 주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1분만 주십시오.

○부의장 이석현 1분 답변하십시오.

○국무총리 이완구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아까 15명과 통화했다 했는데……

○정청래 의원 열다섯 번.

○국무총리 이완구 예, 열다섯 번. 이용희 의장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하고 친분이 아주 두텁습니다, 전화를 서로 주고받을 정도로. 태안군 이용희 의장은. 그래서 서너 번 통화를 하고 나머지는 서로 엇갈려 가지고 통화가 안 된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친분, 아까 자꾸 말씀하시는데 2000년 충청포럼에 가입하지 않았고 2007년, 2008년은 저와 송사를 해 가지고 2년 동안 상당히 험한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관련이 없다가 2013년도에 선진당과 우리 당이 합당이 돼 가지고 그때 이후로 국회의원을 같이 1년을 2013년~작년까지 했던 것 그것 뿐입니다, 본인과의 관계는.

○정청래 의원 예, 들어가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리고 후원금 한 푼도 안 받았고, 그리고 이번 3월 22일 날 저한테……

○정청래 의원 총리! 1분 지났어요. 들어가세요. 이따 발언기회 또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세요.

이번 특별수사팀 구성했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습니다.

○정청래 의원 문무일 팀장을 비롯해서 그 면면의 구성이 그리 나쁘다 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사에서 가장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 언론에 제기되었던 송 회장에 관련된 리스트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의원** 진실을 밝히고 나서 국민들이 그것을 믿어 주느냐 안 믿어 주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 아닐까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저희는 법대로 수사를 하는 사법기관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법 절차를 거쳐서 진실을 밝혀내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지금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관계 없이 일단 이완구 총리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연루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두 분의 지휘를 받는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해서 100% 진실이라고 합시다. 그런들 국민들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그것이 숙제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말씀드릴까요?

○**정청래 의원** 말씀하세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검찰은 비서실장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또 국무총리의 지휘도 받지 않습니다. 수사에 관해서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의원** 장관님은 소가 웃을 일도 참 진지하게 말씀하시네요. 그것을 누가 믿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의원님, 믿든지 안 믿든지 저희는 법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은 저희도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저희 역량을 더 길러서 철저한 수사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를 수 있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특별조사팀을 제가 불신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무총리가 연루되어 있는 이 사건을 과연 지금의 검찰이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기왕에 통과시킨 상설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 잘못됐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

치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할 것입니다.

검찰의 역사를 보면 총리 이상의 신분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처벌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각오로 이번 수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현직 총리를 수사해서 처벌한 적이 언제 있었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아니, 잘 모르면서 답변하세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다만 총리 이상의 피의자를 수사, 이상의 경험을 가졌던……

○**정청래 의원** 전직의 경우는 있었지요.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있었지만 현직을 처벌한 적은 없잖아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현직에 대해서 우리가 신분에 구애받아 본 일이 없습니다. 수사를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또 결론이 나는 대로 처리해 왔습니다.

○**정청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완구 총리님 다시 나와 주세요.

헌법 제65조에 보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등은 국회의석 3분의 1의 탄핵 발의로, 국무총리의 경우는 재적 과반수 의결로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 시 그렇습니다.

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률 위반한 것이 좀 있었지요? 그리고 지금은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스스로 당당하게 ‘나 스스로 국무총리 직무에서 잠시 중지하고, 떳떳하게 수사를 받고 무죄를 입증하고 정정당당하게 총리직을 수행하겠다’ 할 이런 배포는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고인과의 3월 22일 통화에서도 얘기했지만, 또 고인이 주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볼 때 오히려 법과 원칙을 강조했고, 또 고인이 억울한 게 있으면 당당하게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으라고 한 것이 아마 본인이 상당히 섬세하게 생각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 오히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까 김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면적인 모든 자료를 다 갖다 놓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검찰이 앞으로 이 관련해서 전체적인 수사가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제 이름이 있었던 것은 본인이 같은 동향으로서 섭섭하다는 말씀을 제가 주변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태안군의 이용희 의장님한테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오히려 총리가 너무 원칙만 강조하고 동향으로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런 섭섭함을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말씀 올린 대로 정치인으로서 후원금 한 푼 받지 않았고, 정치인으로서 이분이 주도한 충청포럼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2007년과 12년도는 저는 대선에 관여한 바도 없고, 이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연이 전연 없기 때문에 제가 이분에게 돈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정청래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완구 총리께서 성완중 회장에게 조언했다는 말을 다시 조언하겠습니다.

총리께서 그런 말씀 하셨다면서요, 지은 죄가 없고 거리낄 게 없다면 당당하게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총리께 권면 드립니다.

거리낄 게 없다면 잠시 국무총리직을 내려놓고 당당히 수사를 받아서 금의환향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총리가 지금 국정 운영의 이 막중한 것을 놓고 메모에 연유도 모르는 이름이 있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앞으로 할 것이고 수사에 성역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정청래 의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9월 26일을 성 전 회장이 돈 준 날로 말한 줄 착각하고 '나는 23일 날 독일에 갔다', 거짓 해명이 들통났어요. 그리고 지금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돈 받았다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국민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총리도 그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처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오히려 총리는 지금 본인에게 섭섭하게 했기 때문에 본인이 주변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변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총리가 너무 섭섭하게

하더라', '법과 원칙을 너무 강조하더라', '매정하더라'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무총리로서 3월 12일 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마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 사건 내지는 사회 기강이 서야 된다고 강조한 연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의원 제가 총리께 물러나라고 했습니다만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한 가지는 꼭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을 1주기 전에 발표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이것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9일 날 차관회의 연기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총리는 제가 알고 있기로 총리에 관한 기사만 나면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세월호 유가족 만나러 약속해 놓고 노란 옷 입었다고, 2명 입었다고 경찰이 막았는데 왜 그냥 경찰한테 전화해서 오시라고 하지 그랬어요?

○국무총리 이완구 열한 분이 오시기로…… 열두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구십 분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대화가 될 수 없다고 하는 판단 속에 대화를 하기 위해서 잠시 연기했다고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총리의 오늘 답변 태도나 내용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지기 바랍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이 총선에서 좀 잘됐으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로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기준이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부패 스캔들은 박근혜 정권을 열 번이라도 탄핵해야 할 사유가 될 것입니다.

의원내각제라면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이 사건에 내각이 총사퇴해야 될 그런 사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권석천의 '시시각각'이라는 칼럼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은 이제 정치적 수사를 넘어 실제적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대선자금 의혹은 박

대통령을 지구 끝까지 따라갈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해외에 나가셔야 되겠는가? 1년 전 대통령의 7시간 공백이 의혹과 불신을 키웠다. 해외에 나갈 거면 앞으로 72시간이 박 대통령에겐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 모든 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를, 결단을 기대합니다.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정청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때로는 의원님들 질의가 격앙되기도 합니다마는 정부는 그런 때라도 침착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갑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울 노원갑 출신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노원갑 출신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첫해는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의 문제 그리고 또 그다음 연도에는 세월호의 침몰사건으로 인한 책임 문제 또 이어서 성완중 리스트 사건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이 국정을 아주 대혼란으로 이끌고 여야 간에 정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현안, 주요한 개혁현안들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실종 위기에 있거든요.

여하튼 지금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정청래 의원께서 총리와 고성완중 의원 간에 일종의 줌 가깝게 지낸 것이 아니냐 하는 뉘앙스의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같은 충청권 출신으로서 누가 생각해도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관계가 되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여기, 뭐 저도 총리 이전에 국회의원 신분입니다마는 여야를 막론하고 충청권 정치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다들 우리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마는 고인과는 그렇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2000년 설립한 충청포럼, 2007~2008년도에 제가 도지사 할 때 도청과의 2년에 가까운 아주 힘겨운 송사 등등으로 해서 또 같이 함께한 그런 정당이랴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소원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고인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또 이미 모 신문에서 녹취한 데도 나와 있지만,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고인께서는 사업을 오래 하신 분으로서 인간관계로 모든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분이었고 저는 40년 공직생활을 통해서 국가 경영은 원칙과 법에 의해서 되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소신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인간관계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 특히 제가 국무총리로서 국정을 통할하는 그런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의하지 않고서 할 수 없다는 그런.....

○**이노근 의원** 예, 총리,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야 정부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총리라는 자리가 마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아니겠느냐, 지난번에 부패와의 전쟁입니까? 할 때 보면 뒤에 법무부장관이 배석하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 성완중 의원께서 총리에 대해서 줌 도와 달라고 그랬는데 이걸 서운하게 생각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돌아가신 분의 속내를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마는 돌아가신 후에 주변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 같은 동향으로서 도와줄 수 있고 한데 도와주지 않았다는 점하고, 두 번째는 총리가 3월 12일 날 담화 직후에 3월 18일 날 경남기업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또 3월 22일 날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총리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대단히 줌 섭섭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

○**이노근 의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법무부장관 나오실래요?

고 성완중 의원의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야당에서는 마치 가물속에 단비가 온 듯 이것저것 중구난방 식으로 아주 굉장한 비판을 하고 허무맹랑한 근거 없는 소문들이 많이 떠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사의 원칙을 정확히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상 공직사회에 다들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마는 외압이라는 것이 무슨 청와대나 또는 검찰 고위층이나 이런 데에서만 외압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외압은 여든 야든 정치권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외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개입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로 외압금지 원칙을 천명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의원님 말씀을 공감하면서 저희 검찰에서는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수사 이외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기 위한 노선을 견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노근 의원** 그건 정확히 지켜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일정한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면 그 자체가 자칫하면 수사에 결과적으로 방해가 되거나 지연되거나 공정성을 잃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외압금지 원칙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비판할 때는 정확한 어느 정도의 단서나 증거도 없이 마녀사냥 식으로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과거에 무슨 사건이 터지면 앞서 가지고서 뭘 파헤쳐 가지고 전부 조사관이 되고 심지어 수사관이 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재판까지 해 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초래하거든요.

마치 지금 고 성완중 의원 리스트도 이런 쪽으로 가지 않나,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게 좀 염려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증거주의 원칙을 명확히 채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게 여론몰이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여론 수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증거에 의해서 사실 조사를 하고 또 확인된 사실관계에 기초해

서 법리 검토를 해서 법대로 정확하게 처리해야 된다,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여론이나 또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독립적 결정을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큼니다.

○**이노근 의원** 참고로 고 성완중 의원께서 메모지를 남겨 놓으셨고 또 녹취록도 지금 있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히 그것을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증거의 효력, 능력은 어느 정도까지 감안될 수 있는 것인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어떤 고인의 메모지가 증거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이나 또 만들어진 앞뒤 정황이나 신빙성에 특별히 신빙할 만한, 특신상황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특신상황에 맞는 것인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이 되고 그런 특신상황이라고 법률적 판단이 안 되는 때에는 증거능력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이런 점 저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수사해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노근 의원**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내거는 것은 별건수사 금지의 원칙입니다. 저도 공직을 오랫동안 해 봤기 때문에 직원들이 무슨 수사관한테 불려 가면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다른 것을 조사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소를 하고 이러한 사례를 많이 봐 왔잖아요. 실제 장관님께서도 과거에 그런 세월을 거쳤으니까 그러는데 이것도 일부에서는 자원외교면 자원외교에 타깃을 줘서 수사를 하지 왜 이것을 별건을 가지고 이렇게 수사하느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 이 성 회장 사건은 러시아의 캄차카 광구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은행권으로부터 성공불 용자를 받았습시다. 이것이 바로 자원개발 투자인데요. 그 과정에서 비리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것을 밝히다 보니까 회사 내부의 분식회계도 발견이 되고 이런 일련의 것들이 연결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별건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노근 의원** 향간의 소문은 성완중 의원께서 왜…… 그런 주장이거든요. 왜 자원외교면 자원외교지 이것을 누구를 불려 가고 누구를 불려 가 가지고 온통 압박을 해서, 즉 강압수사의 압력을

받았다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부에서 또 정치적 딜까지 요구를 했다는, 소문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수사 과정에서는, 특히 성 회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는 변호사 3명이 참여해서 시종 같이 했습니다. 압력이 가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딜이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참여했던 성 회장의 변호사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압력이나 딜은 없었다 이렇게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이런 점들을 유념해서 그동안 수사를 해 왔는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서 참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노근 의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사건 자체가 나라의 전체 국정은 아니거든요. 이게 통제로 나라의 국정을 삼켜 버리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더 큰 피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수사 원칙하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을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특별수사에 역량이 있는 검사들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이 검사들을 통해서 공정하게, 그러나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오래 가지 않도록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도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노근 의원** 아울러 아까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동아일보에 사설로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고서 유사한 질문이지만 하겠습니다.

성완중 회장께서는 아마 두 차례의 수사를 받고 또 2심 항소심까지 처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재판을. 두 번 다 상고심 안 가고 포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상고심 안 가고 포기한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해 놓고 그 이후에 사면을 했기 때문에, 물론 사면을 한다는 것은 기대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대개 자기가 억울하면 상고심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정치권이나 뭐하

고 유착관계라는 의혹을 누가 봐도 상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사건이 됩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다 비리와 관련된 사건이었고 선거나 비리와 관련된 사건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건이 어떻게 해서 사면 복권이 되었는가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노근 의원** 그런데 과거의 얘기를 들어 보면 사면 복권 시기가 돌아오거나 그런 조짐이 있으면 정치권이나 외부의 엄청난 로비가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금품 문제까지 오고 간다는 풍문이 과다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2007년 12월 31일 날 행담도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이때 고성완중 회장께서 불구속기소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일정한 형이 선고가 됐는데 여기에서 상고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상고를 포기하고 바로 이어서 사면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사전에 교감이나 이런 것 없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외부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마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 저희가 파악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노근 의원** 그 당시 보면 우선 상고를 포기했다는 그 자체, 그러니까 이것이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든가 문제, 그다음에 초고속 사면 복권을 했다는 얘기에요. 금방 또 사면 복권이 돼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문제, 그다음에 또 명단을 비공개로 했다는 문제 그리고 그 기업에서 뭉치돈이 빠져 나갔다는, 사실 여부는 이걸 아닙니다, 이 문제가 동아일보에 사설이 나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또는 잘 모르면 모른다고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 저희들이 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의 말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사면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보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과거 정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가타부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노근 의원** 그런데 사면 복권할 때 리스트 작성 최초의 책임자는 누구이고 또 그것을 작성할 때 참여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입니까? 어느 기관의 누구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기본적으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사면의 시기와 범위를 결정하셔서 저희들에게 실무적인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추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리를 해서 그것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형식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노근 의원** 그러니까 자연인에 대한 명단은 실무적으로 법무부에서 작성하지만 그 중간 중간에 교감을 할 것 아닙니까, 청와대 민정비서실이나 비서실장이나?

○**법무부장관 황교안**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보좌하는 대통령 보좌기구들이 도움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노근 의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보좌하는데 이걸 갖다가 대개 ‘누구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아닙니까? ‘기업인 누가 어떤데’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안하지만 오늘인가요, 문재인 대표께서 ‘나는 관여를 안 했다’, 당시 아마 비서실장이신 거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아니면 저렇게 해명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여하튼 그건 뭐 답변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주도면밀하게 봐야 된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총리께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리비아 한국대사관이 포격을 당했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이노근 의원** 최근에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측 입장은?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노근 의원** 이게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OECD

나라가 34개 국가 같은데 이 중에 31개 국가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데가 스위스·일본·한국인데 지금 스위스는 영세중립국,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또 이것이 유엔에서 권고한 거고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말씀 경청해서 정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노근 의원** 이게 전에 제기됐었는데 일부 야당에서 인권침해와 직권남용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아마 폐기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든 법안에는 이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조항과 직권남용 방지 조항이 충분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의에 입각해서,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좀 노력해서 가지고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노근 의원** 들어가시고요.

다음, 법무부장관 나오시지요.

소송촉진에 관한 법률 아시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압니다.

○**이노근 의원** 그 기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절차에 따라서 기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노근 의원** 그게 일단 법령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일부에서는 혼시적 조항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늦어도 너무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이노근 의원**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에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이것은 황당한 겁니다. 대법원이 입법·사법·행정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대법원 판사 그분들은 의무입니다, 의무.

여기에 예를 들어서 8년이 지난 것도 있고 6년, 5년, 5년 뭐 쪽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이건 민사나 행정사건이 많은데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이게 참 곤란하잖아요, 이렇게 질질 끌면?

지난번 존경하는 한명숙 의원께서 기소돼서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습니다.

○**이노근 의원** 그런데 왜 그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1년 7개월 가까이 됐는데.

○**법무부장관 황교안** 대법원에서 그게 장기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저희 검찰에서 대법원에 신속히 사건을 심리해서 선고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촉구서를 보낸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법원에 그런 부분을 좀 독려해서 재판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노근 의원** 저는 그래서요 이 자리가, 원래 입법·사법·행정이 있으면 견제와 균형의 장치인데 왜……

대법원 쪽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국민들 한번 보십시오. 한명숙 의원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벌써 1년 7개월 되는데 주심판사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대법원에 친구들이 있어 가지고 물어보면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질질 끌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걸 어떻게 물어봅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뭔가 확행되는 이걸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일부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처리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도록 하고 또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노근 의원** 또 포스코 부실경영과 관련해서 여쭙 보겠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03년에 부채가 7조 5000억이었는데 2010년에 30조 7000억, 2014년에 39조 9000억입니다.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또 회사, 종속회사라고 그러는데 2003년에는 51개, 그다음에 2010년에 114개, 지금 185개입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2009년에 A였는데 2014년에 BBB+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하고 무디스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문제가, 이게 국민기업 아닙니

까? 그렇다면 금융감독원 같은 데서 이걸 전체적으로 감시해야 되겠습니까마는, 제가 의혹을 두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검찰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박원순 시장 관련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포스코의 사외이사를 동시에 했고 또 아름다운재단·아름다운가게 이쪽의 총괄 상임이사입니까? 임원 자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쪽 돈을 빼다가 이쪽 돈에 기부금 형태로 준다면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이게 상법상 특별배임죄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정확한 사안을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노근 의원**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이게 어떻게 도덕적으로 가능합니까, 도덕적으로라도? 더군다나 다른, 지금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또 존경하는 안철수 의원도 똑같습니다. 거기 사외 시절 있을 때 회계감사보고에서 ‘이 회사는—성진지오텍인데—더 이상 존속할 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님, 대정부질문에서 왜 만날 야당 인사 이야기만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수사를 촉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안합니다.

(「마이크 꺼졌네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것을 그냥, 이렇게 되면 시민단체가 고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거기에서 인지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서 저기 하면.

○**법무부장관 황교안** 어떤 기업이든 잘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업의 경영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고, 다만 비리가 있으면 또 그것이 어떤 기업이든 철저히 수사해 나가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계속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노근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충분치 못해서 제대로 질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이노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부평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의원**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부평을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입니다.

지난달 이완구 총리는 부정부패 척결이야말로 국가의 미래와 명운이 달린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라며 부정부패 척결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고 성완중 회장이 목숨과 바꾼 56자의 메모 증언으로 권력의 장막 속에 숨겨져 있던 박근혜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가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키고 유지시키는 동력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한 몸이나 다름없는 전·현직 비서실장, 현직 국무총리, 대통령 심복이라 알려진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2012년 대선의 주역 홍문종 의원까지 박근혜 정권의 핵심 권력 실세들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커다란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 내고 신뢰의 자본을 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 성완중 회장이 남긴 56자의 증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끊임없이 말해 온 신뢰의 자본에 대한 파산 선고입니다.

공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검찰을 청와대의 하명 수사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신뢰로 가장된 화려한 유체이탈 화법으로 진실을 왜곡·축소·은폐해 온 박근혜 정권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며 성역 없는, 한 점의 의혹이 없는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본질의 질문하기 전에, 오전에 총리의 답변 중에서 '지난 청문회 때 사과를 한 번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사과를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국민……

○**홍영표 의원** 제가 그것을 가지고 논쟁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나 이 언론 보도입니다.

'이완구 인사청문회, 사과만 30번' '사과자판기'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청문회가 그렇게 오래전에 있었던 일도 아닙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의원**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 이완구** 그 사과의 의미는 포괄적 의미에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드려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이지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말씀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홍영표 의원** 성완중 전 회장께서 이번에 자원 외교, 자원개발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다가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의 간사입니다.

저는 검찰에서 경남기업의 해외자원개발권을 수사한다기에 굉장히 의아스러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해외자원개발에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총 규모가 61조입니다. 규모가 61조고 확정된 손실만 해도 한 4조 원에 가깝고 앞으로도 얼마가 더 낭비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경남기업은 2012년에 감사원에서 116억 원의 지분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 외에 자원개발하고 관련이 없는 회사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국조특위에서 단 한 번 아마 지나가는 식으로 거론됐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마치 경남기업이 몇십조에 달하는 해외자원개발 의혹의 대표적인 기업인 것처럼 이렇게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했고 '아, 역시 이번에도 꼬리 자르기로 누군가 희생양을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 성완중 전 회장의 증언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자원을 뒤지다 없으면 그만뒀어야지. 제 마누라와 아들, 오만 것까지 뒤져서 가지치기 해 봐도 없으니까 또 1조 원 분식 이야기를 했다. 저것이랑 제 것을 덜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덜 할 게 있어야지'

그리고 지난 1일 날 부인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회사 법인카드 200만 원 쓴 것도 횡령 혐의로 수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원 비리에서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검찰이 별건수사로 해서 고 성완중 회장을 죽음에 몰아넣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성완중 회장, 고인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홍영표 의원** 아니, 성완중 전 회장께서 죽기 전에 증언한 이런 사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수사가 잘 됐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이 수사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은 바도 없고 또 보고할 이유도 없고 보고할 그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과 해외자원개발 문제와는 구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현재까지 약 34조 원 정도의 국민의 세금이 투입됐고요. 또 앞으로 한 30여 조 내지 플러스알파가 투입이 될 것 같은데 이 수사와 성완중 회장 수사 건과 본질적 의미에서 해외자원개발 문제는 구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영표 의원** 오늘 제가 또 제보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성완중 전 회장은 죽기 전 두 시간 정도 김기춘 비서실장 집 부근에서 배회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도 ‘나는 성완중 전 회장을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께서도 오늘 오전에 ‘2013년 이후로 국회에 들어와서 1년 동안 의정생활을 같이 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홍영표 의원** 제가 또 오기 전에 어제 아주 분노에 찬 한 분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총리님 다 아시겠지만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우리 이완구 총리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인준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충청포럼에서 나섰습니다. ‘충청 총리 낙마되면, 다음 총선 대선 두고 보자!’ 그런데 이것이 불법 게시물이라 붙일 수가 없으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지도자협의회 이런 명의로 해서 충남에서 수천장의 이런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이것이 전 성완중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총리께서 알고 계셨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여기에 충청……

○**홍영표 의원** 아니, 이런 일은 알고 계셨느냐고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저는 전혀 모릅니다.

○**홍영표 의원** 전혀 몰랐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영표 의원** 그다음에 그러면 성완중 전 회장께서 이완구 총리 인준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을 전혀 몰랐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전연 모릅니다. 제가 답……

○**홍영표 의원** 나중에 고맙다는 인사도 안 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홍영표 의원** 전화 통화도 안 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답변 기회를 한번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영표 의원** 예, 하십시오.

○**국무총리 이완구** 여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충청 의원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충남·충북·대전·세종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완구를 국회 비준에서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플래카드가 수천 매 달린 것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오전에는 제가 충청포럼에 전화를 해서 부탁했다고 그러는데, 이 충청포럼이라는 존재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실체가 조직화된 그런 조직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또 저와는 전연 연결이 없는 조직입니다.

또 성완중 회장님께서 그때가 얼마 되지 않아…… 한 두 달쯤뿐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저하고는 연락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저는 제 인준을 앞에 놓고 어느 누구와도 통화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청권에서 플래카드 한 수천 매가 붙은 것은 자발적인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 충청포럼과 제가 연결됐다거나 또는 그 당시에 플래카드가 게재된 것과 저 개인적으로는 전연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홍영표 의원** 모른다고 딱 잡아떼시니까 제가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플래카드 한 장에 한 7만 원 정도 한답니다. 그래서 아마 한 5000장 이상이 그 일대에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게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저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뭐 모르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성완중 전 회장을 비롯한 충청포럼의 많은 분들이 아무튼 그렇게 총리님의 인준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이 자리에는 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충청권 여야 의원님들 함께 하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추후로 밝혀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플래카드와 관련해서 충청포럼에 전화한 적도 없고 성완중 회장님과 전화한 적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제 휴대폰을 제출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성완중 회장과 통화가 됐는가 안 됐는가……

○**홍영표 의원** 그러니까 총리께서는 성완중 전 회장과 전혀 연락, 접촉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그것은……

○**홍영표 의원** 그런데 3월 22일 날 전화를 받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난 몇 년 동안에 단 한 번 그렇게 전화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아닙니다. 2013년도 4월 달제가 보궐선거로 들어와 가지고 보니 같은 정당이 됐습니다, 선진당과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같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같이 했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3월 22일은 3월 18일 날 성완중 회장 경남기업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고 난 4일 후에 저도 휴대폰을 보니 3월 22일 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억울하다, 좀 도와 달라…… 그래서 저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니 억울함과 그러한 것이 있으면 검찰에서 밝히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적, 그것입니다.

○**홍영표 의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일체 전화도 없고 최근에 만나지도 않았는데……

○**국무총리 이완구** 아닙니다. 같은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서로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홍영표 의원** 그런데 그렇게……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료 의원이 가깝지도 않고 그런데 구명하는 전화를 그렇게 총리한테 직접 드리고 그럴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의원 시절에 같이 함께 의정활동을 했으니까요. 제가 원내대표 때도 자주 만났습니다.

○**홍영표 의원**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완구 총리께서는 고인이 되신 성완중 전 회장님하고 관계를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고 싶은 모양인데……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하면서 같이 함께, 원내대표 시절에 소속 의원으로서 같이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홍영표 의원** 아무튼 좋습니다.

성완중 전 회장은 2002년 16억 불법 정치자금을 자민련에 제공한 것으로 고생도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이완구 총리께서 자민련 원내총무이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몇 년도 말씀하셨습니다?

○**홍영표 의원** 2002년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2002년도면 시기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홍영표 의원**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2002년도에는 제가 신한국……

○**홍영표 의원** 2002년입니다. 한참 되긴 했는데 원내총무고, 그때 이거 때문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요?

○**홍영표 의원** 아니, 아니요, 성완중 전 회장이.

○**국무총리 이완구** 그건 모르겠습니다.

○**홍영표 의원** 아니, 자민련 원내총무 하셨는데 그 일을 몰라요?

○**국무총리 이완구** 성완중 씨는 그 당시에 정당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기업인이지요.

○**홍영표 의원** 그래도 아무튼 당시에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고생까지 했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러니까요, 그분이 정당인이 아니고 기업인으로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표 의원** 아무튼 그렇고요.

하여튼 딱 부인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고 성완중 회장의 측근들이 이 총리가 청문회 당시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충청포럼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부인하시니까, 딱 잡아떼니까 제가 어떻게 입증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돼서……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요, 의원님, 충청포럼의 실체가 뭔지는 모르지만 충청권의 수천 명의 플래카드……

○**홍영표 의원** 아니, 제 말씀 듣고……

○**국무총리 이완구**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영표 의원**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고 성완중 전 회장께서 ‘장학재단, 자문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 총리를 돕게 됐다’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성 회장 측근 두 전·현직 군의원들에게 전화하신 문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그 새벽에 열다섯 번 전화를 해서 서너 번 통화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은 ‘협박성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의원님의 관련된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말씀하신 분이 의원님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면 또 새벽에 전화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라면 전화 안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도지사 할 당시에 군의회 의장을 하신 분이기에 때문에 또 수시로, 그 당시에 지사 할 때 수시로 전화했던 분이기에 때문에, 친분이 있는 분이기에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하고, 마침 그날이 토요일 날인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전화한 것이지 제가 그분과 친분이 없으면 전화할 수가 없지요.

○**홍영표 의원** 그러면 그분이 거짓으로 언론에 말했고, 총리님이 그것을 항의하신 겁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아닙니다. 제가 한 세 번, 네 번 정도 통화한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통화가 안 돼서 이렇게……

○**홍영표 의원** 아니요. 제가 여쭙는 것은 그분들은…… 군의원, 누구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분은 저는 통화는 안 했습니다.

○**홍영표 의원** 아니, 통화하셨다는 분이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닙니다, 그분은 무슨 대변인 같아요. 저는……

○**홍영표 의원** 아니요, 전 군의원으로 통화하셨다는 분이요.

○**국무총리 이완구** 이용희 전 군 의장님.

○**홍영표 의원** 예,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그걸 보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분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확인 전화 하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총리로서 아무리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급한 마음에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화한 것에 대해서

는 의원님 지적도 제가……

○**홍영표 의원** 아니, 그런데 왜 그분은 ‘총리나 나를 협박하는 것으로 들렸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거는 좀 과한 말씀이지요. 어떻게……

○**홍영표 의원** 아니요, 그거는 그분의 말씀이에요. 제가 만들어 낸 말이 아닙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글썄, 그분이 그렇게 느꼈는데, 협박이라는 게, 무슨 협박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마른 세상에 협박이 되겠습니까?

제가 한 얘기를 가지고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이 세상에 협박이란 있을 수가 없지요. 공개적으로 저하고 통화한 내역을 지금 다 이렇게 공개하는 마당에 협박이 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좀 과한 말씀 같습니다.

○**홍영표 의원** 과한 말씀이 아니고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분들이 과한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홍영표 의원** 그분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국무총리 이완구** 그리고 저는 정치인으로서……

○**홍영표 의원** ‘국무총리가 협박을 했다’ 이렇게 언론에다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글썄요, 그건 그분들 생각이지만 저는 정치인으로서 제 이름이, 제 이름을 언급한 사람, 특히 저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한테…… 더군다나 성완중 회장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 얘기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총리로서 좀 자제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아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듭니다.

○**홍영표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고 성완중 전 회장께서는 ‘자원 쪽 뒤지다 없으면 그만뒤야지 제 마누라와 아들, 오만 것까지 뒤져서 가지 치기해 봐도 없으니까 또 1조 원 분식 얘기를 했다’, 사실상 별건수사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고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한 중요한 한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별건수사를 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서울중앙지검의 특수1부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특수1부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홍영표 의원**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수사하실 계획 없으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아까 다른 의원님의 말씀에도 제가 그 부분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는데요.

이 사건 수사에는 러시아 캄차카 광구 개발 관련해서 성 회장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성공불 용자금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자원개발 비리와 연루가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수사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분식회계를 통해서 금융기관을 속이고 성공불 용자금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분식회계를 통해서 기업 비리와 연결되고 또 해외자원개발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수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자원외교와 관계없는 별건수사를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홍영표 의원** 그래서 지금 별건수사 관련한 먼지털기식의 이런 기획수사, 이것에 대해서 수사나 조사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별건수사를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홍영표 의원**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자원개발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27조, 앞으로도 한 34조가 투자돼야 됩니다. 이미 2012년에 감사원에서 최근에 문제가 된 최소 국민의 혈세 2조 원이 낭비된 캐나다 하베스트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시에 내부 수익률을 조작하고 또 할인율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때 감사원에서 적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1명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무수한 해외자원개발 의혹에 대해서 지금 검찰은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수사를 안 했습니다.

이 성공불 용자만 해도 지금 85개 사가 관련돼 있습니다. 유독 경남기업을 이렇게 해서 고 성완중 회장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권력의 실세나 산업부 등 정부 부처, 공기업 임직원 단 1명이라도 처벌한 적이 있습니까? 단 1명도 없습니다.

저는 2012년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도, 그때

많은 사실들을 적발했습니다. 내부규정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해서 투자하게 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단 1명도 고발조치하거나 임직원마저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다 승진했고 지금 현재까지도…… 제가 말씀드린 캐나다 하베스트, 최소 2조 원 정도의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는데 329억에 매각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까지 덮어두고 있다가 왜 경남기업의 166억 지분 특혜 받은 것만 문제를 삼는 것인지 그리고 성공불 용자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찰에서 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의원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의원** 예.

○**법무부장관 황교안**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시작된 지가 벌써 10여 년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사업이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그런 과제였습니다. 다만 초기에도 그런 문제 제기가 없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인 수사의 단서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수사의 단서들이 나타난 부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기업의 분식회계와 그것을 통한 성공불 용자금을 받은 비리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수사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범죄가 그전에도 있었는데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특정기업을 수사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수사단서를 저희들이 죽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 시간이 좀 걸렸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는 자원개발과 관련된 비리가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검찰의 특수역량을 모아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기업에 대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 저희들은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홍영표 의원** 권력의 실세를 지키는 그런 영역을 만드는 수사는 하지 마십시오.

○**법무부장관 황교안** 성역 없이 수사하겠습니다.

○**홍영표 의원**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완중 회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 앞서 ‘늑대는 잘 되고 있냐’며 거듭 확인했다고 합니다. ‘맑은 사회를 앞장서 만들어 주시고 꼭 좀 이렇게 보도해 달라’며 정확한 보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목숨을 건 증언이 권력에 의해 거짓으로 바뀌지 않을까 걱정했던 망자의 초조감이 느껴집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대한민국의 참혹한 밑바닥을 목격한 국민들은 정직, 신뢰, 청렴의 재건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왔으나 최종 파산해 버린 신뢰의 자산 이제 우리 모두의 손으로 다시 쌓아 나가야 합니다.

세월호 사고 1주기, 사고 희생자 304명의 명복을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홍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강릉 출신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강릉 출신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입니다.

성완중 전 의원께서 자진의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이 생전에 작성한 메모와 언론과의 인터뷰로 정치권은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고 국정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성완중 전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측컨대 자신을 성공한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해 준 지난 노무현 정부 때와는 달리 적극적인 구명활동을 해 주지 않은 현 정치권의 모습과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정권 창출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원칙만을 고집하는 박근혜정부의 원칙주의에 크게 실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 전 의원이 남긴 메모와 녹취록의 내용 자체만으로도 국민들께 많은 충격과 실망을 드린 만큼 검찰은 대한민국의 명예를 걸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관련된 인사들이 하나같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증거는 고인의 발언과 쪽지 한 장 뿐입니다. 따라서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국회는 또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정쟁의 소용돌이에 파묻혀 극심한 이진투구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도 소위 ‘성완중 리스트’라는 메모에 이름 석 자가 적혀 있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권성동 의원** 오전에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총리께서는 ‘성완중 전 의원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또 성 전 의원이 만든 충청포럼에도 가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대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권성동 의원** 그리고 또 ‘충청권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로부터 성 전 의원을 걱정하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고인의 구명 활동과 관련하여 검찰이나 어디 다른 청와대나 여기에 관해서 의견 교환을 한 적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검찰이나 청와대로부터……

○**권성동 의원** 청와대와 성 전 의원을 살리기 위해서, 구명활동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거나 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런 사실 없습니다.

○**권성동 의원** 전혀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전연 없습니다.

○**권성동 의원** 그러면 동료 의원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어떻게 답변을 하거나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동료 의원들에게 ‘이 사안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갈 문제지 총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본인이 억울한 게 있다면 검찰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소명을 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 이완구** 예.

○권성동 의원 재·보선을 앞둔 상황에서 야당은 벌써 이번 사건을 정치 쟁점화시켜 정파적 이득을 보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도 되지 않은 쪽지 한 장의 내용을 두고 벌써 친박 게이트 대책위부터 결성하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건은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내야 할 사안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께서도 엄정한 수사,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야당만 협조하면 됩니다. 검찰 수사에 ‘감나라, 배 나라’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불필요한 의혹 제기로 검찰의 수사에 혼선만 초래하지 아니하면 됩니다.

이번 사건을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정쟁, 9부능선을 넘어서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대하기 위한 정쟁, 4대 구조개혁의 발목을 잡기 위한 정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미래세대의 짐을 덜어 줘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가야 하는 이때에 정치권의 정쟁으로 아까운 시간만 허비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또 우리의 미래와 후손을 위해서도 올바른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성완중 전 의원의 사건이 국회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은 성 전 의원과 경남기업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서 제기하였고, 야당은 또 성 전 의원을 청문회 증인으로까지 신청하였습니다.

거기에다 국무총리께서는 취임하시자마자 부패와의 전쟁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해외자원개발 관련 비리를 척결 대상으로 천명하였습니다.

검찰은 총리담화 발표에 따라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동시다발적으로 해외자원개발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여기에 모든 언론은 성 전 의원과 경남기업이 성공불 용자와 관련하여 엄청난 부정이 있었고 암바토비 니켈광산 지분 교환 등에 관련하여서도 엄청난 특혜가 있었던 것처럼 무차별적인 의혹 보도로 성 전 의원을 해외자원개발 비리의 주역으로 낙인찍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을 보면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성 전 의원은 4개월에 걸친 여론의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성완중 전 의원의 죽음은 우리 국회, 정부, 검찰, 언론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명백한 증거나 자료 없이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사회적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 수사 등 사정정국 조성은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매력적인 아이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부정부패 척결하는데 이에 동의하지 아니할 국민이 어디 있고 부정부패 청산만큼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대 모든 정권은 5년 임기 내에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 부정과 비리는 발본색원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슨 군사작전하듯이 미리 단죄를 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방법입니다. 수사 과정은 철저히 배일에 싸여 있어야 하고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성완중 전 의원 사건처럼 국정조사에서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 수사 과정이 요란하게 보도되면서 수사 대상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하고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범죄인으로 낙인찍는 이러한 관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번 성명서를 발표한 바와 같이 부패와의 전쟁 대상에 해외자원개발 관련 비리를 적시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해외자원개발 전체가 부정과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제도와 정책은 사람이 집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생길 소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 인한 부정과 비리가 발생한다고 해서 제도와 정책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제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패러다임이 바뀔 시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부정과 비리에 관한 첩보와 단서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첩보와 단서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하고 그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으면 수사를 당연히 접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수사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기서 끝내고 계속 파 가는 수사는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받은 많은 기업인들이나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현재 검찰의 수사 관행은 금방 장관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먼저 안 나오면 기업의 아킬레스건인 분식회계 그리고 비자금 조성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별건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범죄 사실을 포착하면 수사 대상자와 뇌물 제공 여부에 대한 거래를 시작합니다.

검찰 수사를 받은 기업인들이 정말 황당해 합니다. 처음에 수사 대상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없으면 수사를 끝내 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파고들고 파고들고 파고들고, 그러다가 분식회계 나오면…… 분식회계 기반으로 은행대출 받으면 사기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또 비자금 조성하면 횡령입니다. 이것을 제가 두둔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간 다음에 그다음에 수사 대상자에게 ‘공직자 등에게 뇌물 준 것 자진납세하지 않으면 네 회사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한번 해 보자’ 이렇게 겁을 줘요. 그렇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장관님, 변호사 하셨는데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으셨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분식회계에 대해서, 분식회계를 수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들리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식회계는 기업 비리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식회계가 발견되면 그것으로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어떠한 불법들을 행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사건도 막 거기서부터 수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권성동 의원** 장관님, 분식회계가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검찰이 수사를 할 때는 어떤 정보를 갖고 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권성동한테 뇌물을 줬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해 밝히지 못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압수수색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분식회계 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면…… 분식회계라는 게 아주 간단한 것이거든요. 100원 지출했는데 99원 지출했다, 그것도 분식회계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모든 기업이 안 걸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네 회사가 망할래 아니면 돈 준 것을 불래’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한테 돈을 줬다는 첩보나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거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받고 나온 사람들 하는 얘기가 미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최소한 A라는 사람한테 돈을 주었다는 것을 추궁하려면 그 사람한테 돈을 주었다는 정보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내놔라, 원님 재판식 수사를 한다 이겁니다,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이런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권성동 의원** 그 부분은 참……

○**법무부장관 황교안** 아무 정보도 없이 다른 수사를 위협하면서 정보를 내놔라, 이런 수사는 해서도 안 되고……

○**권성동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 저희가 여러 번 그런 부분에 관해서 주의를 주고 또 경고를 하고 있어서 현장의 분위기는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지금도, 그런 관행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일어났습니다. 그저 철저히 좀 지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성완중 리스트와 관련해서 특별수사팀 구성했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습니다.

○**권성동 의원** 언론 보도된 지 이틀 만에 구성을 했습니다.

저는 당일 날 구성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틀이나 늦어진 이유가 뭐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처음에 나온 것은 쪽지, 메모지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바로 수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모지에 대한 필적 감정도 바로 착수를 했고 또 휴대 전화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 휴대전화에 대해서 포렌식을 의뢰했습니다. 뭐 이런, 또 언론사에 음성파일 그것을 좀 제출해 달라 이런 요청도 하고 이런 기초작업을 한 뒤에 그런 기초작업의 결과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판단해서 특별수사팀을 바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권성동 의원** 알겠습니다.

상설특검 도입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를 시작했고, 공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기본방침을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천명을 했습니다. 열심히 수사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특검 논의를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치권에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의원** 철저히 수사해 주시고요.

성완중 전 의원이 참여정부 때 두 번이나 사면을 받았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한 정권 내에서 두 번 사면받은 경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굉장한 특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주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언론에 여러 가지 의혹 보도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게 범죄의 단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래전의 일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건만 가지고 바로 범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특별수사팀에서 수사를 전반적으로 펼쳐다 보면 관련되는 자료들이 확보될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별도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경향신문의 녹음파일은 건네받으셨습니까, 제출받았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경향신문 측에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그거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빨리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단서인 것 같은데……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지십시오.

총리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국회는 국민과 민생을 위한 민의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우리 국회는 많은 국민들께서 대권을 위한 정쟁의 장이 되어 버렸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얼마 전에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차남의 병역 문제라든가 미분양 아파트 구입 문제 등에 대해서 해명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정치 공세를 하였습니다.

저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총리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보다는 여당의 차기 대권 주자 중의 한 사람에 대해서 싸울 자르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얼마 전에 야당의 문재인 대표께서 ‘의원 정수가 400명이 적절하다’ 이렇게 거론했습니다. 또 가볍게 얘기했다는 문재인 대표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 집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이제 6년이 되었기 때문에, 오래되지는 않았습시다라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민생과 정책을 위해서 서로 지혜를 교환하면서 토론하는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잘못된 점만 보고 흠집내고 깎아내리기 바빴고 야당은 여당에 유리할까 봐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총리께서는 저보다 더 오랜 정치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이러한 견해에 반대하지는 않으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우리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승자독식 구조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역대 정권 때마다 불법 대선자금 사건이 발생하거나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현행 대통령제 때문

에 발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성완중 리스트 의혹을 비롯해서 YS·DJ 불법 대선자금 논란, 차떼기 사건, 노무현 캠프 대선자금 사건 등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지난 대선 때에는 여야 후보 모두 약 500억 원에 가까운 대선자금을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다 보니 측근들이나 후보자의 입장에서 불법적인 자금에 대한 유혹을 거부하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 바로잡기 위해서 저는 하루빨리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해서 과연 지금의 헌법 체계가 우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인지 또 시대정신에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현행 헌법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에서 이 문제가 어느 때인가는 논의가 돼야 된다는 점에 인정을 하면서도 다만 논의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로서도 경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총리님, 이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논란이 오늘의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낳았는데요. 이 해외자원개발,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8월 제3차 해외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 골격이 갖추어졌고 이명박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을 그대로 계승해서 집행했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대강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그리고 해외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97%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해외자원개발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인정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권성동 의원 그리고 이번 성완중 의원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성공불 용자 이게 198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왜 그랬을까요?

○국무총리 이완구 이번의 해외자원개발 문제의 본질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규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약 한 34조 안팎의 엄청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문제는 제가 감사원의 지난 3월 달에 발표된 사안을 놓고 볼 때 앞으로 3·4년, 4·5년 내에 또다시 그러한 규모의 돈이 투입된다는 점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플러스 알파까지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투자가 됐는가 하는 점을 이제는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행여 이 시점을 놓쳐 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엄청난 어떤 시행착오를 범할 수가 있으니까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이라든가 냉정한 그런 판단을 한번쯤 점검을 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권성동 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철저한 검토와 재발 방지책은 마련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도나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기업이 제대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철저히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 감사원이 성과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총리 주재로 TF를 만들어서 범정부 차원에서 개선택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감사원은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제가 3월 달에 공기업 관련 회의를 열었고 또 감사원이 지금 2차 해외 감사 및 각 공사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고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권성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남 의원 서울 강서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입니다.

이완구 총리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잔인한 4월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흘 뒤면 다시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됩니다. 참사 후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문제의 진단, 특단의 대책, 구조 개혁, 이 중에서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총리, 관료의 입장이 아니라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말해 주십시오.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위, 특별법 시행령, 모든 것을 원칙대로, 약속대로, 무엇보다 민심대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민심대로요. 그렇게 할 태세가 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민심을 많이…… 하겠습니다.

○신기남 의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세월호 유가족들의 여러 가지 바람을 경청하겠습니다. 또 국민들의 바람을 경청하겠습니다. 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국민의 안전이라는 가치에 우선권을 두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신기남 의원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총리, 국민의 대표 출신 총리답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기남 의원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6주년 기념일입니다.

1919년 4월 13일 민주공화정이 시작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수립 96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그림 두 점을 소개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좌우 화면에 나온 그림은 14세기 중엽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공화정을 펼치면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 시에나 시청사 건물 안에 남아 있는 프레스코 벽화입니다.

암브로조 로렌제티가 그린 ‘좋은 정부의 효과’, ‘나쁜 정부의 효과’입니다. 어떤 정부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로서 시민의 삶은 극명하게 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은 과연 어떤 정부의 효과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박근혜 정권 출범한 지 2년을 넘어 3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제 여론조사 기관인 글로브스캔의 26개 주요 국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박근혜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취임 1년 차에는 48%, 2년 차에는 44%, 3년 차인 지금 39%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총리, 박근혜정부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론조사라는 것은 등락을 거듭하는 거니까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방산비리라 할까 여러 가지 경기침체 또 문서유출 사건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많이 영향을 주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남 의원 보수정권이 들어선 지 7년 동안 국민은 계속 불행했습니다. 국민은 이제 한때나마 걸었던 기대를 다 접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는 활력을 잃은 채 양극화만 심화되고 4대강 사업이다 자원외교다 해서 엉뚱한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외교는 미숙하기 짝이 없고 안보는 불안하고 통일의 길은 멀어져만 갑니다. 매사에 중북 프레임, 중북 프레임을 걸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억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국민은 감시받으며 말조심하며 살아야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방위산업 비리에서 보듯이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여당은 왕년의 차떼기당 오명을 벗겠다고 국민 앞에 맹세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지금 다시 불거진 비리 게이트를 보십시오. 아직 사건 초입 단계라 다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고인의 유언장이 된 그 메모 한 장, 이것만 봐도 이것은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는 직감이 듭니다.

현직 대통령을 둘러싼 핵심적 인물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연루돼서 리스트에 오른 사례가 일찍이 없었어요. 1대, 2대, 3대 대통령비서실장이 한꺼번에 올라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모든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은 참담합니다.

어느 언론에 ‘국정 동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그 기사 보셨지요? 그렇게 써 있어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신기남 의원 그 말이 참 적절하다고 여깁니다.

총리,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고 정부는 이를 어떻게 다룰 것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아직 그 발견된 메모의 내용만 가지고 속단은 대단히 좀 어렵습니다마는 비

상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예의 주시해 가면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기남 의원** 어느 여당 의원의 말처럼 ‘야당이 국정 발목을 잡고’ 이렇게 이런 정도로 하찮게 보면 안 되는데요.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신기남 의원** 그렇게 보지 않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대단히 비상한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기남 의원** 야당으로서는 오히려 정부의 기를 살려주고 싶을 정도예요, 지금.

국민의 여론을 아셔야 합니다.

총리 자신과 현직 대통령비서실장도 리스트에 올라 있어요.

‘수사를 위해서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총리가 메모에 왜 올라와 있는지는 저 자신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예단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법과 원칙을 강조한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는 오히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고인으로 하여금 대단히 섭섭했다는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메모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예단해서 거기에 거론된 분들이나 또는 저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기남 의원** 지금 이 리스트가 전부라고 믿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다들 여기는데 앞으로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것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썽, 그것은 검찰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분의 평소 행태로 볼 때는 대단히 많은 분들의 정치인과 교류가 있지 않았었는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기남 의원** 2012년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서 조직·직능·당무조정본부장을 맡았던 핵심 인물들이 다 올라 있어요. 공교롭게 지금 다들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나가 있지요.

고 성완중 전 의원은 대선 당시 선진당 원내대표로서 새누리당과 합당을 위한 실무 협상을 주도했고 합당 이후에는 새누리당 대선 선대위 부위원장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본부장들과 교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고 성 전 의원도 ‘그 돈은 대통령 선거에 썼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지요.

자, 이쯤 되면 이 사건은 평범한 비리가 아니라 대선 자금 게이트가 돼야 한다 이런 견해가 강합니다.

총리, 대선 자금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2007년과 2012년 양 대선에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에 답변키가 좀 곤란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신중하게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기남 의원** 대통령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지요. 그 워딩을 제가 그대로 따는 겁니다. 검찰총장은 “한 점 머뭇거림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라.”고 특별수사팀에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사건에서 검찰을 믿기 어렵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고 성 전 의원도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로 기자한테 신신당부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보도해 달라고?

권력이 검찰을 압박해서 진실을 왜곡한 사례가 많습니다. 하나의 최근 예만 들어 봐도, 2013년도 채동욱 검찰총장이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소신 있게 수사했습니다. 권력이 채 총장의 사생활을 뒷조사해서 언론에 흘렸습니다. 법무부까지 나서 가지고 채 총장 사생활 조사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한 시간 만에 채 총장은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표를 내고 말았습니다. 채 총장 쫓아내고 그를 따르던 소위 호위무사들도 다 좌천되어 버렸어요. 원래의 수사팀이 다 해체되어 버린 것이지요. 치졸한 정치공작이었습니다. 그러니 현재 대통령이나 검찰총장 말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총리, 대통령이 한 말은 마치 먼 산 보고 얘기하듯이 너무 한가합니다. 외압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더욱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리가 건의할 용의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남 의원** 그 말이 너무 한가하다는 말입니다. ‘엄정히 대처하기 바란다’ 그리고 끝입니까? 말 이외에 뭐 특별한 방안 없었어?

○**국무총리 이완구** 대통령으로서 저는 적절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단계에서는요.

그래서 검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했으니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기남 의원** 검찰 수사 결과가 흑이나 하다가 역이나 하게 되면 또 부득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이 정부의 외교·안보·국방·통일 분야, 즉 외치가 불안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이 분야마저, 외치마저 전에 진보정권이 이룬 성과에도 미치지 못하고 전진은커녕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총리, 외교·안보·국방·통일 분야, 불안하다는 평가에 대해서 수긍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저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외교정책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기반한 드레스덴 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 관계가 지금 잘 풀리지 않아서 대단히 답답한 국면이 있습니다라는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유연한 기조에서 앞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 올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기남 의원** 외국을 부지런히 다닌다고 외교 정책 잘하는 것일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외교는 미숙하기 짝이 없고 안보는 불안하고 통일의 길은 멀어져만 간다고 제가 얘기했어.

우선 인물 등용부터 문제가 많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직업군인 출신, 군부독재정권 인물, 통일 비관론자 내지 방관론자로 평가되는 인물들을 요직에 전부 임명해 왔습니다. 거기다 지역편중 현상도 다른 분야보다 심하다는 그런 지적이에요. 원래 이 정부가 지역편중이 심하지만 이 외교·안보 문제하에 있어서 더 심하다 이

거예요.

눈이 핑핑 돌 정도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민족의 앞날, 첩첩산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헤쳐 나가려면 새로운 안목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대거 발탁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구태의연한 인사로 과연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더군다나 우리 지상과제인 민족통일이 가능할지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총리, 이러한 인물 등용에 대한 부정적 평가 수긍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최선을 다해서 해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능력과 자질에 입각해서 많은 인재를 쓰고는 있습니다라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재적소에 많은 인물들이 등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 건의도 드리고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기남 의원** 최고 안보책임자를 직업군인 출신으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개인적으로 직업이 중요하다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철학과 소신과 그리고 역량과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분이 과거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의 말씀의 뜻을 잘 헤아려 가지고 앞으로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기남 의원** 국방부장관을 직업군인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임명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러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신기남 의원** 외국은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기남 의원** 총리에게 주어진 임명제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시대에 맞는 책임자를 기용하도록 하십시오.

○**국무총리 이완구**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신기남 의원** 정치 오래 했으니까 사람 보는 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민 여론도 알고?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신기남 의원** 총리, 그러면 이 정부의 외교·안보·국방·통일에 대한 정책적 기조, 앞으로

나갈 비전을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국무총리 이완구** 기본적으로 한미 간의 굳건한 안보와 함께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분야에서 기조를 튼튼히 하고요, 대중국 관계는 역시 무역기조가 제일 일순위에 있기 때문에, 규모가 제일 크기 때문에 중국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굳건한 저거를 하고요. 한·미·일 간에 여러 가지 안보 측면에서 협력관계를 기조로 하는 그러한 기조속에서 북한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부단한 대화의 통로를 열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신기남 의원** 사드(THAAD) 얘기가 내일도 많이 나오겠는데요. 사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습니다.

총리,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서 'G2 거대 양국인 미국과 중국이 대한민국을 무대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국내외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기본적으로 사드는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사드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저희가 검토한 적도 없고 결정된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사드 문제가 거론이 된다면 철저히 우리 국익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기남 의원**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은 모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소위 3NO, 요청도 없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냥. 그 틈에 국론은 분열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조차도 혼선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뭐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말씀하신 대로 3NO 기조하에 있습니다라는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신기남 의원** 국익,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최우선하는 국익, 그거는 저는 통일이라고 봐요. 안보, 경제 이것도 결국은 민족통일이 되어야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통일되지 않으면 안보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불안하지요. 경제가 되겠습니까?

총리, 통일이 최고의 국익이라는 말에 동의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동의합니다.

○**신기남 의원** 그러면 제일가는 국익, 통일전략이 뭐니까?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기본적으로 민족공동체를 확립하면서 남북 간의 평화를 기조로 하는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부단한 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통일의 길로 가는 것이 통일의 기조라고 생각합니다.

○**신기남 의원** 우리 최고의 국익, 우리의 목표가 민족통일이라는 그런 사고를 우리 내각이 다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후순위로 미뤄 놓는 것 같아요, 내각이. 특히 보수정권의 내각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총리, 정치도 오래 하셨으니까 그런 시각에서 내각을 통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기남 의원** 한반도가 한·미·일 남방 3각동맹 대 북·중·러 북방 3각 동맹 여기 대립구도에 편입되는 순간 우리 통일의 길은 멀어집니다. 물론 우리 현재 여건상 미국과의 방위동맹은 굳건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미래상을 위해서는 신냉전구도로의 편입만은 막아야 합니다.

총리, 이 시점에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취해야 할 외교적 전략을 한번 설파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이완구**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한미 간의 동맹은 안보를 비롯해서 어떠한 분야든지 굳건한 동맹관계 이른바 포괄적 전략관계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중국과의 관계는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한미 또 한중 관계는 철저한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한쪽은 포괄적 동맹관계, 한쪽은 전략적 협력관계로 가는 그런 두 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기남 의원** 용어만 쓰셨는데 하여간 제가 총리한테서 여기서 시원한 대답을 짧은 시간에 들으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최고의 화두라는 것,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외교전략이 어떻게 가야 한다는 것,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기남 의원**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로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미국과 중국 사이.

개헌, 현행 헌법은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의 연장에 불과합니다. 개헌을 많이 했습니다만 헌법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부분인 국민의 기본권 이것은 방치되어 왔습니다. 권력구조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본권을 강화하는 생활 개헌이 되어야 돼요. 시대에 맞게 개정되기를 기다리는 기본권 조항이 헌법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기본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시대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기남 의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이 경제의 블랙홀이 될 것이다 하고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개헌 문제가 민생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은 근시안적인 단견입니다. 적시에 시대가 요구하는 개헌을 단행함으로써 민생과 민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국가 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잡을 수도 있어요. 아이슬란드의 최근의 개헌의 예를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 나라가.

○**국무총리 이완구** 예.

○**신기남 의원** 총리, 대통령에게 이와 같은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개헌 움직임에 참여하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기본적으로 의원님의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자칫 개헌 논의가 가뜩이나 힘든 이 경제 상황에 블랙홀이 되어 가지고 국력이 분산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기남 의원** 개헌을 해야 민생과 민권이 편다니까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러나 우리 정치의 현실상……

○**신기남 의원** 기본권 개헌……

○**국무총리 이완구** 빨아들일 수 있는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는 생각도 한번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신기남 의원** 국정원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국정원을…… 여기 애국심과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참 많아요. 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음습한 정치공작에 동원한 적이 많았어요.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만 강력한 정보기관이 될 수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총리,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어느 정도나 받고 있다고 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부분적으로 한때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정원 개혁을 통해서 현재는 국민적 신뢰를 많이 회복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 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기남 의원** 지금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실을 밝혀낸 사람들이 재판 받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동료 의원들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신기남 의원** 위법행위 현장을 발견한 사람을 상은 못 줄망정 거꾸로 지금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하고 있어요. 감금죄라나, 뭐라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검찰권 이렇게 행사해도 됩니까?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에요. 재판을 계속 할수록 검찰은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총리, 강기정·이종걸·문병호·김현 의원, 공소 즉시 취소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총리가 재판 중인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신기남 의원** 재판이 아니라 공소권입니다. 검사가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보고를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총리가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기남 의원** 공소권 취소는 할 수 있어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도 마찬가지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독자성에 대해서 총리가 관여할 수 없음을……

○**신기남 의원** 법무부장관은 안 할 거 같으니까 총리보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테러방지법 얘기가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신중해야 됩니다. 2001년도에 정부제안 법안이 제출된 이후 틈만 있으면 같은 종류의 법안이 제출되고 있어요.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정보수집 권한, 그다음에 조사권, 시설보호·경비를 위해서 군 병력까지 지원하게 할

수 있어요. 정보기관이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는 유례없는 일로써 이거 신중히 다루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기남 의원 수사권 문제도 있어요. 수사권 준 것도, 김종필 전 총리의 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어 보세요, 언론의.

화면 나올 텐데, 안 나오나?

김종필 총리가 얘기했어요. ‘국가정보원이 수사권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가 정보부 만들 때 넣었던 것은 한시적으로 넣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김종필 총리가.

총리가, 존경하는 김종필 총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한번 김종필 총리님 만나 보겠습니다.

○신기남 의원 국가정보원이 과도한 권한 장악 시도를 자제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신뢰 속에 세계적인 정보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신기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정갑윤 신기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북·강서갑 출신의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부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박민식 의원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북구 출신 박민식 의원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세월호 참사 1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유가족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는 용서와 평안이 자리 잡기를 기원합니다.

얼마 전 우리는 또 한 가지 불행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고 성완중 의원의 일입니다. 비록 의원 신

분 이전에 일어난 일들로 인한 결과이지만 안타깝습니다. 또 당혹스럽습니다.

하지만 진짜 뼈아픈 이유는 신뢰받지 못한 우리 정치가 다시 한 번 진짜 위기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중 회장이 남긴 메모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미 이 사건을 불법대선자금 사건이다, 사상 초유의 부패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메모에 나온 그 사실만 가지고 예단은 대단히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민식 의원 문재인 대표께서 ‘관련된 사람들이 모든 직책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이름이 거기에 거론된다는 사실만으로 막중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직책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대단히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민식 의원 지금 총리도 금액은 없지만 성함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어떡세요, 총리, 솔직하게?

○국무총리 이완구 지금 현재 돌아가신 분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 길은 없습니다마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변에 말씀하신 것을 미루어 짐작하면 저에게 대단히, 저의 담화, 총리 담화와 함께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고, 그로 인해서 타깃 1번으로 됐다고 하는 그런 섭섭함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에게 섭섭함의 토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민식 의원 그런데 지금 총리께서 담화문 발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담화문 발표하자마자 오비이락 격으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포스코든, 성완중 회장 사건은 아니지만…… 그 담화문 발표하고 검찰 수사 압수수색하고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어떡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께서도 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총리가 검찰의 수사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며칠 가 가지고 자료 축적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상당한 시간 동안에 자료 축적이 된 하에서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말씀 올린 대로 총리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자성에 저해가 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리 담화가 3월 12일 날 됐고 압수수색이 3월 18일 날 됐는데 그 5, 6일 사이에 압수수색에 총리 담화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박민식 의원** 어쨌든 그러면 총리께서는 지금 성완중 회장의 비극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지만 본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그럼 총리도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하는 입장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굳이 이 자리에서 제가 제 심정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고인 입장에서 볼 때는 총리의 담화와 본인의 압수수색이 인과관계가 있지 않겠나, 플러스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도움을 청했는데 제가 법과 원칙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본인이 좀 섭섭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박민식 의원** 좋습니다, 잠시 들어가 계시고.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8대부터 특별검사에 대해서 특검 무용론자, 특별검사는 우리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본회의나 또 상임위에서 수십 차례 제가 한 기억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사건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 특별수사팀 꾸렸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습니다.

○**박민식 의원** 그런데 특별수사팀 검찰에서 하지 말고 차라리 바로 특검 하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검찰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검찰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비리에 관해서 수사를 하다가 성 회장께서 안타깝게 세상을 달리하셨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은 여러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이미 수사를 착수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할 터이니 그 결과를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민식 의원** 아니, 지난해에 상설특검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습니다.

○**박민식 의원** 그 상설특검법 규정에 의하면 우

리 정치권에서, 쉽게 말해서 국회에서 이제 합의 하면 바로 특검이 되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습니다.

○**박민식 의원** 또 법무부장관께서도 요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할 수 있습니다.

○**박민식 의원**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장관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특검을 요청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가 판단할 때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서야 제가 특검을 요청할 텐데 아직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잘 수사를 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도 감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민식 의원** 아니, 지금 성완중 회장 사건이 본인, 고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언론에서도 기획 수사다 사정 수사다 또 이것저것 안 되니까 별건수사, 투망식 수사 이런 비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그런 비난을 검찰이 지금 받고 있는 마당인데 검찰에서 이거 또 특별수사팀 꾸려서 한다 한들 그런 불신을 완전히, 완벽하게 해소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이것은 그냥 처음부터 특별검사, 작년에 또 상설특검법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넘기자, 그런 판단이 오히려 검찰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가 이 사건 이후에 그 내용들을 면밀히 잘 판단해 봤습니다. 검찰의 공정한 수사가 의심되는 단초나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았지만 그런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의 비리가 연루돼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 자신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검찰이 불공정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고 또 특별히 저희들이 수사에 의지를 가지고 있고 역량을 가지고 있는 수사팀을 구성했는데 검사가 아무 관련이 없는, 대상자로서 아무도 포함돼 있지 않은 이런 사건에 있어서 제가 먼저 나서서 특검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은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식 의원** 지금 오십다섯 자 메모지 한 장, 뒤 추가로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십다섯 자 메모지 한 장이고 그 작성한 분은 돌아가

셨습니다. 사실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에 의하면 수사가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검찰에서는 누구 거명된 사람들은 이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메모지 한 장으로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별건수사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 쉽게 말해서 누구 거명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처벌을 해야 검찰 수사가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지 한 장으로는 힘든 거지요.

그러면 사돈의 팔촌까지 또 다 뒤져서라도, 시쳇말로 하면 감옥에 보내야 검찰 수사가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이래서 또 별건수사 하려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이번 사건의 초점은 메모지에 나와 있는 분들의 금품수수 여부에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모든 사항을 조사할 것이고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면 처벌 자체를 위해서 수사를 별건수사로 펼쳐 나가는 이런 일은 없도록 감독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박민식 의원** 이 사건이 상당히 오래전 일입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정치자금법이다, 뇌물이다, 공소시효가 7년이다, 10년이다 이런 갑론을박이 있는데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은 형식 논리, 그러니까 형식적인 법 논리에 매몰되어서 공소시효가 어떻다 저떻다를 떠나서 국민들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켜 줄 책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없어서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특검을 논의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감독하겠습니다.

○**박민식 의원** 하여튼 실체적 진실을 정말 신속히 밝혀서 국민들의 의혹 그리고 정치 불신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성완중 전 의원 사건인데 어떻든 부정부패, 지금 담화문도 부정부패 척결해야 된다는 담화문을 발표하셨는데 그 담화문과 이 사건이 인

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 척결의 대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박민식 의원** 자, 그렇다라고 하면 총리께서 어떻게 보면 솔선수범해서라도, 아까 말씀하셨습니까마는 본인 이름이 적혀 있어서 상당히 곤혹스럽지요, 뭐 금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검찰에서 총리를 수사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협조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당연합니다. 그것이 검찰이 수사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당연히 협조해야 됩니다.

○**박민식 의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제가 보면서 정말 참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집권 3년 차 사정 정국’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어떻게 총리께서는 과거에 노무현 정부다 또 이명박 정부다 또 지금 정부, 이렇게 집권 3년 차에 뭔가 좀 기획된 수사, 사정 정국을 조성해서 뭔가, 단임제 대통령이 3년 차 되면 쉽게 말해서 힘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하는 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의 정부든 참여정부든 이명박 정부든 어느 정부든 간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신 분이 국가의 기강을 잡고 사회를 정화하는 데 기획 사정을 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국무총리란 자리에, 직책을 맡아서 국정을 조금 해 보니까 나라 경영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맡기 전까지는 그러한 정치권에서 떠도는 얘기에 대해서 그럴까라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막상 총리직을 맡아서 운영해 보니까 한 나라의 경영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권이든지 기획 사정이라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민식 의원** 어떻습니까, 우리 총리께서 정치권에도 오래 몸담고 계셨는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까지 보면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 이런 게 거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자리가 상당히 진짜 어떻게 보면 비극이다, 우리 헌정사의 어떻게 보면 질곡이

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총리께서도 그런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대단히 참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저희들이 이 의정 단상에서도 많이 질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측면에서 집권하는 정치세력은 더욱, 대단히 조심성을 하고 더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민식 의원** 아니,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많이 있어도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가릴 것 없이 다 이런 일이 생긴 걸 보면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만, 정치인들만 부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왜 그런 비극이 자꾸 생긴다고 보십니까, 반복적으로?

○**국무총리 이완구** 7년 정도 저의 미국생활, 미국생활을 토대로 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다면 정치문화와 의식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최소한도 미국의 정치구조하에서는 철저한 회계 투명 내지는 우선 이 비리와 관련될 수 있는 것들이 제도적으로 전부 다 차단이 돼 있고요, 또 회계 처리도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의식구조가 이 검은 돈을 수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문화는 아직 후진적이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박민식 의원** 자,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구조의 문제입니다, 솔직히.

○**국무총리 이완구**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박민식 의원** 보십시오, 총리님.

단임제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 자리를 걸고 피튀기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기면 다 가지고 온 사람들은 다 망하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벌써 정치는 온 데 간 데 없고 다음 차기 대선 때문에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민식 의원**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난 2월에 이 석상에서, 이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제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개헌 문제는 블랙홀이다’ 이렇

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저는 개헌에 적극, 무조건 반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기의 문제라고? 그런데 그 시기를 하염없이 미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비극, 헌정사의 비극을 언제까지 되풀이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여당 의원이지만 하루 빨리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미룰 겁니까? 그리고 ‘개헌이 블랙홀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전면적인 개헌 해야 되고, 지금 88년 헌법 체제는 더 이상 효용이 없어요. 시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어떻게 총리께서 이번 성완종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께 ‘이제 경제도 걱정이지만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반석 위에 놓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적극 건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국회의 정개특위가 지금 구성돼서 활동 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경청해서 조심스럽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식 의원** 좀 적극적으로 개헌에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하신 정개특위 위원인데요, 최근에 문재인 대표께서 ‘국회의원 한 400명으로 늘렸으면 좋겠다’ 또 우리 심상정 대표께서도 ‘한 360명, 늘리면 좋겠다’, 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각자 판단의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올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식 의원** 아, 그런데 이거는 저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허리끈 졸라매고, 다 지금 한 푼 두 푼 아껴 쓰고, 중소기업마다 구조조정이라 해서 진짜 칼바람 속에 살고 있는데 정치 개혁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시작하자마자부터 자기 밥그릇 챙긴다 하면 어느 국민이 이거 납득을 하겠습니까?

제가 지역구 가서…… 국민들의, 주민들의 여론을 혹시 총리, 경청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국회의원 숫자 늘린다는 데 대해서?

○**국무총리 이완구** 아마 국민들께서는 동의해 주시기가 아주 힘든 것 아닌가……

○**박민식 의원** 아니, 99%의 국민들이 반대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민식 의원**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그게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이지요.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 늘리자는 가장 중요한 논거가 OECD 국가 삼십몇 개국 평균 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적다 이거예요. OECD 국가 평균 하면 국회의원 1인당 한 10만 명인가 그 정도 대표하는데 우리는 16만 명 대표하는 거 아니냐, 그 논거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민식 의원** 아니, 그런데 그 OECD 국가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삼십몇 개국. 물론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도 있지만 뭐 룩셈부르크다, 아이슬란드다, 무슨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인구가 한 100만 명, 500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가 반이 넘어요. 그런 나라하고 지금 우리나라 5000만 명 넘는 국가하고 단순히 인구만 그렇게 기준으로 해서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 적다’ 이렇게, 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박민식 의원** 아니, 국회의원 숫자는 우리 헌법에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30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식 의원** 아니,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 200명 이상……

○**박민식 의원** 200명 이상으로 우리 헌법에 되어 있는 이유는 통일 대한민국을 상정하고 남겨둔 겁니다.

그런데 200명 이상이라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500명, 1000명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서 여러 가지 살펴보고겠습니다.

○**박민식 의원** 총리님, 여방야공(與防野功)이다, 이런 말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한문 실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박민식 의원** 여방야공이다, 제가 인사청문회…… 청문회 때 고생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뭐 그 정도면 큰 고생 아니라고 봅니다.

○**박민식 의원** 여방야공, 여당은 방어하고 야당은 공격한다, 이 뜻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여당이 되면 완전히 정부·대통령, 쉽게 말해서 호위무사 역할에 급급하고, 야당이 되면 무조건 또 돌변해 가지고 흠집 내는데, 이거 여방야공…… 그래서 입장이 바뀌면 옛날에 했던 정책, 옛날에 휴대폰 감청하자 또 KBS 수신료 현실화하자, 이런 것을 또 야당이 되면 완전 반대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국무총리 이완구**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민식 의원** 좀 바뀌어야지요, 이제는. 야당 대표님들, 지도부들 찾아가셔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것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민식 의원**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박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구로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이인영 의원**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구로구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이인영입니다.

꽃피는 계절에 떠났다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미안했고,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고, 우리들 이 시대의 양심은 고스란히 팽목항에 잠겨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고, 우리 모두의 진실을 인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월호와 관련한 세 가지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째는 온전한 세월호의 인양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분명하고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기본적으로 세월호 인양은

전향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고요, TF팀의 지금 의견도 인양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인영 의원 그러면 결론을 언제 내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국회 대정부질문 때문에 챙기지 못하고 왔습니다만 조만간 아마 TF팀 활동 종료와 함께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인영 의원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나 또 실종자의 시신을 수습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모두 세월호 인양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 안전을 우선하는 이런 차원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과 관련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입장을 정부가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 조사위 활동의 가동 그리고 후배·보상의 원칙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배·보상의 문제들이 먼저 나오면서 진상 규명을 바랐던 유가족과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우선 진상 규명과 이 배·보상 문제가 선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도 활동을 하고 또 배·보상 문제도 동시에 함께 차질이 없도록 진행시키는 것이……

○이인영 의원 그 말씀이 진심이 되기 위해서는 조사위 활동과 관련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달 전에 이미 정부는 과견 인력들을 철수한 바 있고 또 최근에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과 관련해서 국민과 유가족들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정상적인 조사위 활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유가족들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일 날 차관회의에 올라가는 시행령을 제가 잠시 유보를 시키고 좀 더 유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인영 의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온전한 조사위 활동을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은 저는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한 총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희들은 철회까지 생각을 않고 수정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인영 의원 어떤 근거 속에서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유가족들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 바람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영 의원 잠시 화면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해수부 시행령은 조사 대상, 안전대책의 범위, 위원회의 권한, 사무처의 인력·규모 등을 축소했고 위원회가 마련한 시행령과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사람들은 진실을 온전히 조사하려는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총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공무원과 민간인들이 혼합된 조직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의 조직 내에서는 민간과 공무원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균형된 구성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영 의원 국가인권위의 시행령은 국가인권위에서 주도해서 만들었고 정부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수준에 있었습니다. 이번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서 그 시행령도 마찬가지로 인권위와 같은 과정들이 돼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는 위치로 자신을 물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시행령은 한마디로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셀프 조사하겠다’ 이런 비판이 근거를 갖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를 믿었다가 모두가 죽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시행령을 믿다가 우리는 다시 진실을 다 죽이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부의 시행령은 철회돼야 한다, 정부가 가만히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완중 리스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당사자일 수 있는 국무총리가 들어가시고 법무장관이 대신 나오시기 바랍니다.

법무장관, 어디 가셨습니까?

○부의장 이석현 법무장관, 어디 가셨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잠시 화장실 간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말씀 주시지요.

○이인영 의원 일각에서는 성완중 전 의원의 자살이 자원외교의 비리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이명박 정권과 유착고리로 경남기업이 타깃이 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장관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우선 검찰에서 진행한 성완중 전 의원의 또 경남그룹의 수사 과정에서 이를 인정하거나 부정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인들이 3명이나 참여를 해서 조사 시종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마친 다음에도 조서를 세 시간 이상 검토까지 해 가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속 전 신문 기일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아마 수사팀과 변호인들이 상의를 한 모양인데 ‘정시에 나가서 심리에 응하겠다’ 이런 답변을 변호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들을 검토해 보면 특별히 이상 있는 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인영 의원 표적 수사의 결과가 아니라면 이 사건을 바라보는 법무장관의 시각은 무엇인지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성완중 전 의원 개인의 실패한 로비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권력실세들의 비리 게이트 문제입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 현 정권의 불법적 대선자금의 거대한 단면이 드러난 것으로 보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마는 검사들은 정치적인 고려 없이 수사해서 수사 결과 나타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도 전적으로 법과 원칙의 관점에서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이인영 의원 일반적인 경제활동의 불법성 이것에 대한 수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해외자원개발 투자와 관련해서 비리가 있다라고 하는 여러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있었고 정치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검찰이 과연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상당한 기간 동안 내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비리의

단서가 포착이 돼서 경남기업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인영 의원 어떠한 정치적인 해석의 여지도 없이 오랫동안 준비되었던 또 내사를 거쳐서 진행된 수사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수사의 순수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도 여당 대표도 그리고 검찰도 한결같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외압 없는 수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완중 리스트의 해당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또 수사가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준 사람이 죽음으로 고발한 만큼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런 것이 우리 국민의 정서라는 점도 분명히 전달합니다.

이완구 총리께서도 “소환이 있으면 응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만큼 그 누구라도 수사하고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전 질의에서 장관은 답변을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습니다.

○이인영 의원 그러면 두 번째로 검찰이 수사를 흐지부지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윤희 사건 등에서 국민은 자료를 유출한 경찰은 죽고 구속되었지만 권력을 농단한 당사자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던 수사 결과를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단지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수사의 요식만 갖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돈을 준 사람은 죽어 가고 불법으로 돈을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재·보궐선거가 눈앞에 있으니까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를 취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해태하면 안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안 했습니다마는 세 가지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답을 할까요, 지금 답을 드릴까요?

○이인영 의원 하나하나 하십시오.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 리스트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 달라라고, 누구에 대해서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언론에도 우리가 수사의 의지를 공표를 했고 또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물론 증거가 확보되지 않고 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범죄의 단초를 잡을 수가 없을 때 이럴 때는 수사를 더 해 나아가갈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열심히 수사한 결과 수사의 단서들이 발견되었는데도 수사를 중단하는 일 없을 겁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또 검찰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된 수사가 흐지부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수사팀은 특별수사팀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 특수1부다, 특수2부다, 특수3부다, 그런 특정 부서는 시간이 가도 사건 처리를 안 하고 그냥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론상 어느 부가 존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특별수사팀은 오래갈 수가 없는 팀입니다. 일정한 기간 끝나면 마무리해야 되는데 사건을 흐지부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인영 의원** 저는 이번 검찰 수사가 먹튀 수사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만일 검찰 수사가 조금이라도 미비하면 국민은 당연히 특검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여당 의원 대표도 그렇게 입장을 표명했던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당사자들의 거취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리스트에 해당되는 당사자들입니다. 권력의 최고 핵심 실세들이 공교롭게 모두 다 거명되었습니다. 총리, 비서실장, 장관을 거쳤거나 재임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들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퇴진하거나 일시적인 업무정지 상태로 물러나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저는 공감합니다.

이 문제는 총리께 직접 여쭙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 들어가시고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총리가

직접 매듭지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리가 수사의 대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전에 다른 해명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수사 대상일 수 있는 분들과 통화를 한 것은 무마 또는 회유의 행위로 비쳐질 수 있다는, 부적절했다는 이런 지적 등에 비추어 퇴진하거나 또는 최소한 업무정지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요구에 총리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썬요, 그 메모 쪽지에 나온 제 이름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정황으로 볼 때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충청포럼에 가입하지 않은 점 또 2007년도에 고인과 한 2년여 송사가 있었던 점 또 2007년과 12년 대선에 제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또 정치하면서 고인과 고인 회사에서 후원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볼 때는 제가 고인과 전혀 인간적인 친소관계가 그렇게 깊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금년도 3월 12일 날 총리 담화가 있었고 18일 날 압수수색이 있었고 22일 날 저에게 전화가 와서 여러 가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마는 3월 22일 날 전화통화를 하고 고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저하고 일체 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

다만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억울함을 저에게 호소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저는 고인과 어떤 다른 금품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연유 때문에 제 이름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밝혀질 수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 이번에 거론된 사람뿐만 아니라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고인과 고인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정계에 대한 로비 현황이 드러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져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수사 진행 여하에 따라서는 총리가 과연 여기서 정말 진실되게 답변을 했는가 안 했는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리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총리라고 하는 막중한 그 자리의 의미를 생각할 때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영 의원** 거듭해서 어떠한 정치자금도, 금품도 수수한 바 없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이인영 의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결백함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앞으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영 의원** 이후 수사의 과정에서 혹은 여타의 과정에서 그렇지 않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진퇴를 포함해서 총리가 책임지실 용의가 있는 겁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용의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의원** 저는 그 이전에도 총리가 정치적 영향력의 위치에서 물러난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공정할 것이라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 래야 전·현직 비서실장, 장관, 지사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그 반대의 경우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제 담화로 인한 자원비리 수사가 시작되고, 본인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총리는 참으로 억울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진중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인영 의원**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결 될 때까지 그 진퇴의 문제나 업무정지의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시는 것이 저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한 분으로서 마땅한 도리다, 공복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준비했던 주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은 “임금은 결국 정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정치가 노동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이 시점에서 저는 ‘최저임금이 곧 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면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진보진영의 단골 메뉴처럼 여겨지던 최저임금의 이슈들이 여권과 보수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임금의 문제가 더 이상 노동자들의 생떼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

는 관점에서 재해석되고 있다는 점이 저는 무엇보다 반갑습니다.

저는 보수가 원하는 성장을 위해서도 이제는 노동자들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새로운 차원에서의 존중과 협력을 우리 사회가 요청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임금에 대한 진일보한 접근을 환영합니다.

우선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공통된 견해는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소득격차를 완화하며 소비를 통한 경제 선순환에 기여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리께 한번 묻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정부는 따라갑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최저임금제 인상 문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다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인영 의원** 그 조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러니까 지금 7~8% 정도의 인상률을 가지고 일각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는 위원회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5580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다소 검토할 여지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인영 의원** 어떤 방향에서 검토할 수 있는……

○**국무총리 이완구** 보다 더 인상하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인영 의원** 총리의 그 긍정적인 입장, 이것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고 더 대폭 전향적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오르면 그들의 가정에 소비의 여력이 증가하고 또 소비가 진작되면 내수가 활성화되어 전반적으로 경제 선순환의 구조가 시작될 것이라는 점은 여야가 모두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충분히 공감하는 사안이라고 보여 집니다.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이인영 의원 이는 진보의 소득주도 성장이론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보수가 추진하는 양적확대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례로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향한 텐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아베 정권은 양적팽창 정책에 이어서 임금 인상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문제의식은 아니지만 또 동일한 정치적 성향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영상자료를 보며)

다시 화면을 보시겠습니까마는 한국경제가 극심한 내수침체의 사이클로 들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2~3년 안에 임금을 올려 소비를 증대시키는 정책적 노력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지금이 최저임금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얼마 전 노사정 합의가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사정 선 임금 인상의 정책 방향을 견지한다면 노사정 간에 새로운 사회적 합의로 가는 신뢰의 기반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와 총리의 적극적인 입장을 기대합니다.

총리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영 의원 우리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한 가지 더 검토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몇 %가 적정인가 이런 것을 논의하기 전에 반드시 생계비의 문제는 지금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 8% 이상의 인상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최저임금법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면 무엇보다 당연히 제일 먼저 검토할 것은 생계비의 문제입니다.

저는 정부가 마땅히 최소한 생계비는 보장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액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1인 가구 기준으로 최소한의 생계비가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4인 가족 해서 한 166만 원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의원 4인 가구 기준으로……

○국무총리 이완구 4인 가구, 4인 1가족으로……

○이인영 의원 통계에 따라서 다른데요. 가장 인색한 통계를……

○국무총리 이완구 116만 원 뭐……

○이인영 의원 총리께 입력하신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용역을 주어서 한국통계회사가 2014년에 작성했던 미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는 월 150만 원이 조금 넘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지금의 5580원, 월급 116만 원은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까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실태 생계비 소비지출 항목에 근거해서 통계청, 최저임금위원회의 용역,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런 데서 산출한 생계비의 평균값을 합쳐 보면 174만 원이 좀 넘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면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은 아주 최악의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생활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 원 이하에 미달하는 그런 근로자의 숫자는 630만 명입니다. 근로소득자 1500만 명 중에 40%가 이런 의미에서는 빈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놓고 볼 때 우리가 대폭 전향적인 차원에서 최저생계비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 어떤 생각이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동의합니다.

○이인영 의원 그냥 간단한 대답만은 아니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저도 평소에 사실 의원님과 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의원 총리도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경제 분배구조는 매우 악화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 임금을 올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가경쟁력 등을 감안하면 점진적이고 완만하게 전체 임금의 상승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만큼은 우선 올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임금의 상승은 소비의 규모가 한정되어 자칫하면 부채상환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지만 최저임금의 상승은 기본적인 생계규모에도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소비를 촉진하는 쪽으로 시장으로 다 반영되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말하자면 소비의 효과가 최저임금을 상승할 때 훨씬 직접적이고 단기간 내에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저임금의 상승 노력을 일반 임금의 상승 노력보다 더 크게 하면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소득불평등 구조를 완화하는 데도 동시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 임금의 상승 여부는 노사 간의 자율교섭에 맡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와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과 태도를 기대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인영 의원 이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2014년 GDP 국가순위 13위의 나라입니다. 무역 규모는 8위입니다. 1인당 GDP는 2만 8000불을 넘어섰습니다. 나라의 경제력에 걸맞은 최저임금 기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격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최저임금의 정치를 우리 국회가 또 정치권이 시작해야 한다는 소망을 피력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의 시대를 당장 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라면 올해는 최소한의 생계비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통계를 종합하면 시급 8000원이 적정선입니다. 정부의 용역근로자 시중 노임단가도 8000원입니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의 적극적인 대책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이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중구·남구 출신의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熙國 議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김희국 의원입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무상급식 및 보육, 기초연금, 안전한 국가 건설과

가계소득 증대, 부정부패 척결과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등 많은 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 중 일부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만 아직도 빈부격차의 심화, 일자리의 부족 등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임중이도원(任重而道遠), 임무는 무겁고 갈 길은 먼 형국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는 거울이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처한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역사라는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옛말에 일인정국(一人定國), 즉 훌륭한 사람 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1945년 패전 이후 독일을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었던 콘라트 아데나워 수상은 비전과 철학을 상기하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합니다.

이 위대했던 정치가의 신념은 정치가 독점과 카르텔로부터 자유시장을 지킨다는 신념이었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金熙國 議員 혹시 ‘병길문우천(丙吉問牛喘)’이라는 고사를 들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썽요, 제가 한문 실력이 좀 약해 가지고……

○金熙國 議員 중국 한나라 때……

○국무총리 이완구 ‘시급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자’ 그런 뜻 아닙니까?

○金熙國 議員 예, 그렇습니다. ‘재상은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총리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무엇이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현 시점에서 말입니까?

○金熙國 議員 예,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경제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경제부터 좀 챙겨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金熙國 議員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가장 원하고 바라고 슬프

고 고통스러운 것은 소득과 자산은 늘지 않는 반면에 지출과 빚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중산층 소득은 193만 원에서 579만 원이고요, 그 중위분이 386만 원입니다.

총리님, 2015년 대한민국에서 월 300만 원 정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살기 나름인데 그렇게 여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金熙國 議員 그렇습니다. 특히 하위 중산층인 195만 원에서 386만 원인 가구는 진짜 중산층이라고 말하기가 쑥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金熙國 議員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통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는 중산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중산층은 소득 가장 가운데에 있는 기점으로 해서 50에서 150% 사이에 있는 레인을 일반적으로 중산층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金熙國 議員 예.

○국무총리 이완구 그런데 지금 통계와 체감이 좀 다른 측면이 있어 가지고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체감적으로 볼 때 국민들이 한 10년 전에는 한 오륙십%, 육칠십%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한 이삼십% 본인이 중산층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체감과 통계를 매치시키기가 대단히 힘들게 됐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金熙國 議員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조사를 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월수입이 되고 515만 원 정도 되고, 35평 짜리 아파트에 총 자산이 6억 6000만 원 정도 되어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초등학교 아이들을 2명 갖고 있는 4인 가구는 생활표준비가 527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표하는 중산층과 실제의 중산층의 괴리는 굉장히 큼니다.

총리님, 우리가 1인당 3만 불 소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상? 그러면 가구소득은 절대 평균으

로 하면 800만 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500만 원이고, 실제로는 386만 원이에요.

이 원인이 왜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소득분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저도 소득분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金熙國 議員 그래서 지금 성장은 되는데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우리의 산업구조에 기인하기도 할 것이고요, 또 우리 의식 구조도 일응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熙國 議員 의식 구조라는 게 어떤 뜻이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젊은 분들이 좀 힘든 자리에 잘 가지 않는 그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金熙國 議員 이 문제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교 대니 로드릭 교수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기술 발달이 가져온 생산성 향상의 과실은 기술과 자본을 소유한 계층이 독점하고, 일반 대중은 생산 현장으로부터 축출된다. 즉 실업이 증가한다.", 이러한 이 교수의 진단에 공감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소득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공감합니다.

○金熙國 議員 그 원인을 진단한 것이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고……

○金熙國 議員 기술과 자본을 가진 사람만이 부를 독점하고 일반 대중은 생산 현장에서 축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감하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습니다.

○金熙國 議員 이어서 로드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술문명이란 이름의 귀신을 어떻게 퇴치하느냐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앞날을 결정한다."

누가 이 문제를 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대단히 어려운 이론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간파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답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金熙國 議員 총리님,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전에 이미 선진국들은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아테나워 수상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치가 해결해야 됩니다. 경제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가 전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치가 이 기술문명이라는 괴물을, 귀신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총리님,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철학은 총리님이 생각하시기에 효율과 경쟁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합니까 아니면 정의와 도덕, 독점과 카르텔 타파, 약자 보호, 반칙에 대한 감독 등 사회정치적 가치를 더 우선시한다고 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각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화롭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조화롭게 상승작용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熙國 議員 저는 훨씬 더 분명하고 확실한 가치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그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정책의 방향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를 잠깐만 보시지요.

이게 한국판 노동 카스트입니다. 과거 사농공상과 인도의 카스트제도처럼 4개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이 4개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옆에 임금격차와 또 시간당 생산성을 표시해 놨습니다.

총리님, 이 표를 보면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임금비율은 360만 원 대 204만 원으로 100 대 57입니다. 60%가 안 돼요. 또 정규직 대 비정규직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260만 원 대 145만 원으로 이것도 100 대 56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임금격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문제는 생산성이 차이가 나면서 임금격차가 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생산성은 비슷하면서도 임금격차는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결국 신분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노동생산성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새로운 카스트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신분이 4계급에서 3계급으로, 2계급에서 1계급으로 올라가는 신분 상승의 모빌리티(mobility)가 우리나라는 22%밖에 안 됩니다. 외국은 2배도 훨씬 넘는데요.

이 문제가 결국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정규직 대 비정규직 임금격차의 불합리가 부

의 분배구조를 왜곡하는 가장 큰 대체(大體)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습니다.

○金熙國 議員 지금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총리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노동시장의 이중성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熙國 議員 저는 가장 확실한 세 가지 원인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계의 공간은 비었고 기업의 공간은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10년까지 기업소득은 18.6% 증가했는데요, 가계소득은 1.7%밖에 증가 안 했습니다. 10분의 1도 증가를 못 했어요. 당연히 가계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가계소득이 이렇게 가장 낮은 이유는, 아테나워가 패전 이후에 독일 경제를 다스렸던 독점과 카르텔의 횡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생과 공존을 외면하는 국가나 공기업이나 대기업의 횡포를 끝장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구조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외국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갑의 횡포라는 것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값을 안 줍니다. 갑은 계약이나 납품 단가를 당초부터 낮게 책정하고 원가가 상승해도 제대로 반영 안 해 줍니다. 그 사실은 지사를 하실 때나 또 총리를 하실 때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나라의 가격결정구조가 왜곡돼 있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을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하랍니다. 나는 못 올려 주니까 소송해라, 감사기관들의 횡포는 더 심합니다. 처분을 하고 을이 문제를 제기하면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기업들이 행정청이나 감사기관의 처분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드는 그 비용, 시간, 고통, 나중에 보복당할까봐 느끼는 두려움 이런 것은 총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지금 민간 기업들이 행정청이나 감사기관의 처분을 받고 거기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1년에 몇 건 하는지 아십니까? 전 기관의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청 처분의 승소율이 굉장히 낮습니

다. 무리한 행정처분을 해 가지고 소송을 해서 민간인들이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피해구조도 못 받고 수많은 소송을 하고 있고 결국 대부분 이겨 버려요. 행정청이나 감사원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질 중에도 이런 갑질이 없습니다, 총리님.

국민들이 제대로 일을 하라고 세금을 내서 월급을 주는 공기관들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통절한 반성과 총리님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갑은 현금으로 결제할 능력이 되는 데도 3개월 또는 6개월짜리 어음을 줍니다. 그 어음을 받은 을은 돈이 급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수료를 주고 할인을 받아야지요.

수수료가 대충 몇 %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金熙國 議員 1차로 할 때는 4~5% 와리깡을 합니다. 할인이 됩니다. 2차로 가면 6~7%예요. 마진이 7% 같으면 돈 한 푼도 안 남습니다. 이게 갑을구조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정부도 납품대금을 카드로 쥐 버리게 되면 3%가 대기업에는 카드세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것 납품하는 사람이 몇 % 남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좋은 아이템을 출시하면 갑은 그걸 모방해서 을의 목덜미를 죄고 뺏어 버립니다. 강탈해 버리는 거지요.

재벌 총수들은 친인척 회사에 물량을 몰아 쥐 가지고 하청기업은 사업 할 기회도 없습니다. 특히 물류 분야는 심각합니다. 심지어 대기업이 아예 제빵, 장갑, 순대 장사까지 나서 버립니다.

전 중소기업 회장이 회장직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기업은 웃고 있을 때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총리님, 이 실태를 알고 계시지요?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가 매일 사냥하면 그 초원에 다른 동물이 살아남겠습니까? 총리로서 가장 중요시하고, 중점을 두고 시급한 과제인 이 갑을관계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야 만사가 해결됩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金熙國 議員 두 번째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를 해 왔고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야당의 원님들께서도 이 시대적 소명에 대해서 적극 협

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리님도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해서 공무원들한테 제대로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분들은 굉장히 화가 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하기로 계약을 하고 공무원이 됐고, 나중에 국가가 어려워져서 자기들에게 희생과 부담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님, 얼마 전에 세종시에 근무하는 과장급 전원한테 지난 3개월간 행적을 자진해서 제출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총리가 지시하지는 않았습시다. 다마는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金熙國 議員 다행입니다. 총리님, 중단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지금 열 받아 있는 공무원들한테, 이것은 혐의가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일망타진 식으로 그렇게 모욕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조사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전원 3개월 동안 행적을 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오늘 가시면 이 문제를 시정해 주십시오.

그다음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인세를 올리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법인세 인상의 여부 문제는 앞에 갑이 을에게 제값을 줘야 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를 25%에서 22%로 까준 이유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늘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게 중소기업한테 제값을 줘야 중소기업이 임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올리는 데 저도 동의합니다. 다마는 쌀독에 쌀이 있어야 줄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이 제값을 못 받는데 무슨 재주로 임금을 제대로 줄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안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의 핵심은 제값을 안 주는 데 있습니다. 국가도, 공기업도, 갑도 충분히 제값을 받아야, 적정이윤이 생겨야 임금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인세도 지난 5년 동안에 갑이 25%에서 22% 할인받음으로써 27조가 덕을 봤습니다. 그 돈을 자기들이 가질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줘야지요. 줘야 그 돈을 월급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법인세 문제는 인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보다도 지금까지 받은 그 혜택, 법인세를 낮추어 준 근본 취지가 달성이 돼야만 그 문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대한민국 중산층이다 하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최저임금을 강제적용했을 때 우리 아파트부터 문제가 생겨 버렸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24만 명 정도 되는 경비원들 중에 4만 명이 실직 위기에 몰려 버린 거예요. 저희 아파트에서도 월급을 적게 받는 대신에 일을 하겠다 해 가지고 최저임금을 못 주고 일을 그대로 유지를 시켰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金熙國 議員 최저임금 인상은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 일자리가 줄어들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임금인상으로 인해서 부도가 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부도를 내고 일자리를 줄이기 위해서 임금인상을 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갑의 횡포를 근절해야만 을의 최저임금을 올려 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겁니다.

총리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동의합니다.

○金熙國 議員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실에 적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 적용이 가능하지 않고 적용했을 때 많은 문제점이 노정이 돼 버린다면 그 제도는 차라리 시행을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정치의 요체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잘 대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소위 성완중 리스트 문제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우리 행정부와 의회는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와 각종 제도를 정비할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앞으로 행정 할 때 꼭 제대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熙國 議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중산층도 한 달 수입이 500만 원이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비율이 100 대 57에서 100 대 80 정도 되는 그런 희망을 꿈꿔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김희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김제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김제남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성완중 리스트가 공개되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의 민낯, 부정부패의 몸통과 뿌리가 드러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새누리당의 핵심 지도부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되어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이 죽음 앞에 남긴 마지막 인터뷰와 핵심 인물 리스트는 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는 마당에 그 의혹이 거짓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리스트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핵심 인물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등 정권의 핵심입니다. 불법 대선자금 수수가 사실이라면 그 최종 종착지이자 최종 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이기에 박근혜 정권의 명운과 정통성이 걸린 나라를 뒤흔들 사태입니다.

이 의혹은 불법 정치자금, 대선자금 수수, 즉 박근혜 정권 부정부패 게이트라고 규정할 만한 사안입니다.

과거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등장한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조차 권력 사유화, 돈정치, 정경유착, 구태정치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드러난 사실은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경남기업은 수없이 많은 대기업 중에 그리 크지 않은 기업에 불과합니다. 성완중 전 회장이 신뢰관계를 여러 차례 언급하였듯이 불법 자금 수수는 정치권과 재벌 대기업의 그물망처럼 엮인 관계 속에서 구조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완구 총리 나와 주십시오.

부정부패를 척결하실 분이 부정부패에 연루되

었다면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정부패에 연루됐다고 생각 않습니다.

○김제남 의원 연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청탁을 하신 바 없다고 하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김제남 의원 총리나 총리 주변인물이 부정부패에 연루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모든 직을 걸고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의 심판도 받으시겠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당연합니다.

○김제남 의원 곧 사실관계가 밝혀질 테니 아주 국민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성완중 전 회장이 남긴 리스트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그리고 2012년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들이지요? 맞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요?

○김제남 의원 아니요. 리스트 얘기 드렸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김제남 의원 아, 잘 모르세요? 여덟 명 리스트……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김제남 의원 신문도 안 보고 나오셨습니까?

성 전 회장은 이들에게 제공한 자금이 박근혜 후보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선거에 썼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불법 대선자금으로 쓰였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이 증언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그러한 증언을 들은 바도 없고 그런 생각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김제남 의원 내용도 안 보고 오셨군요.

저는 증언이 사실이라면 불법 대선자금의 최종 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정경유착, 부정부패 게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 또한 인정…… 하실 말씀이 없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현재까지는 고인이 남겨 놓은 쪽지에 불과하니까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

서 철저하게 규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제남 의원 저는 이것이야말로 총리가 천명한 성역 없는 부정부패 척결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김제남 의원 총리께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격언 알고 계시지요? 윗물이 맑아야지요. 그러려면 윗물을 맑게 하는 것, 총리 본인도 예외 없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들을 최우선 대상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윗물이 맑아야 됩니다.

○김제남 의원 두 번 다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 권력이 성완중 리스트에 의해서 밝혀진 박근혜 게이트, 새누리당 게이트 이런 일로 국민들이 이렇게 침통하고 분노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정부패 척결에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질 자신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부정부패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제남 의원 그런데 걱정입니다. 대통령 명을 받고 움직이는 총리이십니다. 이런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할 총리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과연 대통령 명을 받고 계신 총리가 이것을 해 낼 수 있을지, 또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역임하신 분께서 새누리당 핵심 지도부를 향해서 이 부정부패 척결의 칼날을 겨누실 수 있을지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대통령 통치 스타일을 볼 때 앞으로 전개될 일 또한 매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썽,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제남 의원 그렇다면……

○국무총리 이완구 전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제남 의원 그러면 검찰이 지금까지 청와대의 지침 없이 독립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적어도 박근혜정부에서는 청와대보다는 검찰이 독립적·중립적으로 수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제남 의원 그동안 청와대는 수시로 검찰에

게 검찰 수사 방향타를 제시해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통치가 검찰 권력 그리고 청와대 측근 인사를 통해서 과도하게 권력이 독점되어서 입법부의 입법권, 사법부의 사법권 무력화시켜 온 것이 아니냐, 이미 국민들이 의혹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검찰 권력을 통해서 사정 당국을 만들고 레임덕을 관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의 본질은 대통령의 최고 측근, 핵심 실세들이 줄줄이 연루되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심지어 총리도 당사자로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현 검찰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심장부를 향해서 과연 검찰 수사를 향하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검찰 수사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제남 의원 보다 권력의 입김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신 바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특별검사는 국회에서 합의를 해 주시면……

○김제남 의원 도와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도와준다는 말씀은 좀 과한 말씀 같고요, 국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정부는 최대한도로 협조해서……

○김제남 의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처럼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런 엄청난 사안은 특검에 맡겨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상설특검법 도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특검 건의드릴 의향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일단 검찰 수사가 착수됐으니까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보고요. 국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는 특검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제남 의원 협조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김제남 의원 많은 의원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총리를 비롯해서 성완종 리스트에 나와 있는 현직 실세들이 직을 내려놓고 엄정한 수사에 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직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대

단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결정된 사안이 나타나야 직을 내놓는 것이지 메모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김제남 의원 왜 이렇게 많은 의원들께서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꼼꼼이 들여다보셨으면 합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글썽요, 저는 그 연유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검찰의 철저한 수사 끝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제남 의원 자원외교 수사를 진행하다가 성완종 리스트, 박근혜 게이트가 드러났습니다. 총리께서는 자원외교 관련해서 검찰에 어떤 인물들이 고발되어 있는지 알고 나오셨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김제남 의원 총리께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검찰이 자원외교 수사 핵심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총리가 보고를 받고 있지도 않고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김제남 의원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김제남 의원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자원외교 수사의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자원외교의 핵심 몸통 수사하고 있지 않고 빙빙 돌고 있다가 결국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고요.

본 의원은 자원 공기업 3사 전·현직 사장을 비롯해서 또 많은 국민들에게 의혹을 사고 있는 메릴린치 서울지부장 책임자들을 포함해서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개별 사건은 총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제남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작년 11월 일인데 고발인 조사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번 성완종 리스트 이 일로 표적수사다, 정치수사한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 답을 하실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도대체, 자원외교 수사를 부정부패 척결의 최우선으로 강조를 하셨는데 그 내용도 파악하고 계시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지도 파악하지 않고 어떻게 총리 중심으로 부정부패 척결, 특히 그 부정부패 척결의 핵심으로 자원외교는 배임과 부정, 부실, 국가에 막대한 재정 책임을 준 사안이라고 총리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사태 또한 정확하게 파악도 안 하고 어떻게 자원외교 제대로 수사를 하도록 하고 부정부패 척결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 아니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강조한 것은 500조 원 이상의 엄청난 부채를 지금 공기업이, 모두 국민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앞으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시적으로 해외자원개발 문제를 거론한 것이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김제남 의원 자원외교하고 박근혜 게이트는 권력의 사유화라는 면에서 아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서로 다른 별건수사입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성역 없이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총리께서 국민 앞에 약속 한번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철저하게…… 특히 국민 세금이 그렇게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30여 조 이상의 국민 세금이 들어간 자원외교, 물론 자원외교·자원개발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앞으로 삼사 년, 사오 년 후에 또 다른 30조 플러스알파가 들어가는 이 엄청난 해외자원 투자에 돈이 들어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냉정하고 보다 철저한 그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릴 겁니다.

○김제남 의원 총리님, 흥표근 씨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이완구를 사랑하는 모임의 회원이고요, 2013년 총리님하고 경쟁을 벌였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같은 지역구에서 큰 영향력 행사하는 분 맞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저하고 경쟁관계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제가 도지사 때 도의원 하신 분인데 저하고 경쟁관계라고 생각은 안 되고 그분이 저보다 더 훌륭하시지요.

○김제남 의원 후보 경쟁을 벌이셨잖아요.

흥표근 씨 지금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잘 모릅니다.

○김제남 의원 모르시는구나…… 광물자원공사

상임감사입니다. 같은 지역구 인사인데 광물자원공사 부임한 때 인사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된 것 알고 계신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개입했다는 말씀입니까?

○김제남 의원 구설수에 오른 것이 이미 지난해의 일인데요?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그분과 정치적으로 같은 정당을 해 본 적도 없고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

○김제남 의원 광물자원공사 낙하산 인사였습니다. 같은 지역구고요.

저는 그래서 국무총리가 낙하산 인사 심어 놓고 지역구 챙기기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그런 데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제남 의원 자, 이분이 상임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총리님의 지역구에 사회복지지원금이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역구 관리를 해 오셨을 텐데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러한 부당한 일이 있으면 고발을 해야 되겠지요.

○김제남 의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분이 광물자원공사 부임하고서 유독 총리님의 지역구에, 1년 동안 38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지역구로 내려갔습니다. 그것도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도 없는 일회성 행사, 사회복지와 관련도 없는 지원, 노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챙겨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마는 살펴보겠습니다.

○김제남 의원 부정한 지역구 챙기기도 부정부패 척결의 대상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제남 의원 부정한 지역구 챙기기는 사적 이익 챙기기입니다.

광물자원공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상당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파산 지경입니다. 바로 이런 광물자원공사의 상임감사로, 낙하산 인사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상임감사는 제대로 광물자원공사를 감사하고 있

는 게 아니라 지역구 예산 챙기고 있습니다. 총리님과 같은 지역구입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총리께서 오늘은 답하시지 않았지만 이후 국민 앞에 분명하게 답하셔야 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완구 총리께서 부정부패 척결을 앞에서 진두지휘하실 그런 자격이 있으신가, 저는 이 문제를 검토하면서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저는 40년 공직생활 동안에 부정부패에 한 번도 연루된 적이 없습니다.

○**김제남 의원** 이번 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이번 건도 이름만 적혀 있을 뿐이지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김제남 의원**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황교안 법무부장관 나오세요.

작년 11월부터 자원공기업 3사 비롯해 가지고 자원외교 부정부패 문제 있다, 검찰 고발을 본 의원도 했고요, 한 바 있습니다. 고발인 조사 시작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조사를 시작한 것도 있고 아직 자료를 모으고 있는 단계인 것도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고발인 조사 시작 안 하셨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여러 건 있는데 사건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저는 그래서 자원외교 검찰 수사를 보고 있습니다. 빙빙 돌고 있습니다. 왜 핵심으로 들어가지 않고 겉가지만 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최근에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던 자원개발 비리 관련 사건들을 중앙지검의 특수부에 집중했습니다. 집중하고, 수사를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고 그 와중에서 여러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알고 있습니다.

본격 수사, 총리가 담화 발표하셨지요. 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발언하셨습니까. 이게 이야기가 떨어지기 무섭게 하명수사 벌이시더군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런 분들 말씀 계시기 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사건들을 다 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검찰이 이 부분에 관한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준비를 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김제남 의원** 어제 성완중 리스트 관련해서 특별수사팀 구성 발표하셨는데요.

장관님, 검찰이 대통령 최측근, 새누리당 핵심

지도부를 향해서 부정부패 사건을 발본색원하고 또 그야말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과거에 그랬던 전례들도 있습니다.

○**김제남 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검찰을 믿지 못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저희 검찰은 저희들의 능력이 미치는 한 최선을 다해서 부정부패의 척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아직 그 점에 관해서 좀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제남 의원** 맞습니다.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국민은 지금의 검찰은 정치검찰이다, 그리고 그동안 정권의 요구, 정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움직여 왔고 표적수사가 이루어져 왔다라고 검찰을 따깝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고 권력에 대한 이런 충성경쟁을 벌이던 검찰이 하루아침에 주인을 무는 검찰로 돌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라구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김제남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법무부장관 황교안**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검찰이 정치검찰이 되지 않도록, 바르고 당당하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왔고 감독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심을 받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정치검찰이 되지 않도록, 또 그런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앞으로 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권에 충성하는 충성경쟁을 벌인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에 관해서도 제가 알고 있는 한 우리 지금의 검찰의 모습은 아닙니다. 국민들을 중심에 두고 국민들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아서 수사를 다 못 하는 이런 부분들, 또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마디로 2000여 검사들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이 점을 이렇게 매도하는 것보다는 격려해서 일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제남 의원** 매도가 아니라 그동안에 국민들께 보여 드렸던 여러 행태를 근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홍준표 지사는 본인의 SNS를 폐쇄했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 이유가 증거 인멸 시도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성완중 리스트에 언급돼 있는 분들의 증거 인멸 시도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비롯해서 굉장히 즉각적인 신속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구속수사가 되려고 그러면 범죄가 있고 그 범죄에 대한 증거가 있고 또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자료들이 충분히 소명이 되어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또 그런 전제하에서 구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최정에 특별수사 인력들을 동원해서 특별수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고,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수사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수사, 성과가 있는 수사, 국민들이 원하는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김제남 의원** 본 의원은 박근혜 게이트는 처음부터 특별검사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법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의문시되는 사안에 대해서 특검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김 의원님, 지금 ‘박근혜 게이트’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는 이 사건과 관련된 그 모든 문제들이 성 회장, 성완중 회장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에게 혹시라도 오해가 될 수 있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철저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수사팀도 정비했고 또 검찰의 역량을 모아서 독립적인 수사, 공

정한 수사, 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남 의원** 특검법이 명시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 그리고 공정성이 의문시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님께서서는 특검 검토를 해 보셨냐고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있으면 검찰 중에 누가, 검사 구성원이 이번의 문제에, 의혹에 연루된 것이 있다고 하면 아마 이해충돌의 관점에서 그런 사안에 대한 특별검사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마는 지금 이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거기에 검찰이 연루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량 있는 검사들을 동원해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나 또는 의혹이 가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별도의 판단을 통해서 특검을 논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비리를 밝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제남 의원** 장관님, 맞습니다. 국민이 굉장히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나라를 뒤흔들 사안이다, 대선자금, 정치자금이 불법으로 수수됐다는 의혹입니다. 그리고 그 대선자금을 썼다고 하는 망인의 증언이 있는 것입니다.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장관께서는 특별수사팀도 꾸리는 방안, 엄정하게 수사할 방안도 검토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관님이 특검법에 따라서…… 장관님도 특검에 따라 수사를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특검 검토하셨어야지요. 왜 안 하셨느냐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아니, 아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았지만 특검에 적합한 사안이……

○**김제남 의원** 검토해 보셨습니까? 검토한 내용을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황교안** 아까 다른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검찰이 연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수사를 잘 하겠

다고 하는데 그 시간을 주고 좀 수사결과를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특검에 대해서는 긍정하든 의견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지금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제남 의원 저는 특검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한 의견 주셨으면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직한 정치, 깨끗한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께 지금과 같이 부정부패 게이트가 드러난 것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송구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입니다. 맹골수로의 차가운 바닷물로 가득 차 있는 유족들의 마음 그리고 국민들 먹먹한 그 아픈 마음에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참사를 겪고도 진실 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하자는데 정부 시행령에 의해서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세월호 유가족 그리고 실종자 가족을 거리로 내모는 박근혜정부가 참으로 부정하고 비정합니다.

국민을 외면하고 정치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돈으로 주고받는 보수 양당 정치가 계속된다면 구태정치, 부패정치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 속에 뿌리 내리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구조로 변해야 권력정치, 부패정치가 사라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 입장 내셨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과 집권 새누리당의 최고지도층이, 부정부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은 대통령의 읍참마속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대통령께서 명운을 걸고 약속한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부정부패 척결 약속을 지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자신의 부정부패부터 만천하에 드러낼 때 새로운 대한민국은 시작될 것입니다.

국민 속에 뿌리 내리는 정당정치를 위하여 정당개혁 그리고 정치혁신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

치에 비례적으로 반영돼서 권력부패를 끊고 국민을 위한 정치, 정의로운 정치가 시작되기를 이번 성완중 사태 그리고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성찰되고 책임이 규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의장 이석현 김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이신 민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 비례대표 국회의원 민병주입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지난해 4월 16일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슬퍼하며 애도했습니다.

대처만 잘했다라면 살릴 수도 있었을 아까운 생명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과 부정부패의 고리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기관들의 무능력, 대한민국의 허술한 안전 체계는 세월호 참사로 완전히 그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국민들과 한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은 해소되었습니까?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과 부정부패는 청산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이번 4월 국회는 민생경제를 살피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매일 80억씩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공무원연금만큼은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시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안전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불법과 부정부패, 허술한 안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국가 대개조를 국회가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국회가 약속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소통과 타협의 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국민 신뢰로부터 회복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국민의 요구에 대한 논의와 의견 수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민병주 의원 오전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고 성완중 회장 사건과 관련해서 총리는 충청포럼 회원도 아니고, 2007년에는 성 회장과 충남도가 송사에 휘말렸었고, 그 후 병 때문에 2012년 대선 때는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 회장과 금품 수수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대선 당시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직책 같은 것을 맡지 않으셨나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국무총리 이완구 2007년도에는 제가 충청남도 도지사를 했으니까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때문에 대선에 관여할 수가 없었고, 2012년도에는 제가 1월 초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1년여 가까이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다만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저의 충청권에서의 지명도 때문에 당에서 저를 명단에는, 아마 활동을 못 하니까 명예 무슨 선거대책위원 이런 것으로 넣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거에는 몸이…… 암 투병하는 사람이 무슨 선거운동 했겠습니까? 1년 동안, 그때 사진을 보면 얼굴이 퉁퉁 부어 있기 때문에 유세장에는 한 두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실제 선거 활동은 혈액암 투병 과정에서 할 수가 없었지요.

그것은 다들 여기에, 특히 야당 의원님들이, 충청권 의원님들이 다 보셨으니까 제가 혼자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병주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고요.

국민안전처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침몰 사고 계기로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새롭게 출범했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렇습니다.

○민병주 의원 그래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 노력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국의 각 시도 또는 산불 화재나 대형 재난사고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소방형 헬기가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 대전은 7개 광역시 가운데 인구수가 네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헬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대전시를 포함해서 세종하고 제주에는 소방 헬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방 헬기가 없기 때문에 대전은 협약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충청남북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금 현재 부족한 대전을 포함해서 세종·제주에는 헬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에 보면 긴급 구조를 요청하면 바로 즉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헬기 108대를 포함해서 군에서 가지고 있는 헬기도 즉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가의 안전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회의 안전사고는 압축 성장 과정에서 ‘빨리 빨리’라는 문화에서 발생한 면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로 ‘빨리 빨리’보다는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잘 알겠습니다.

○민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리께서 다시 나와 주십시오.

지난 몇 년간 발생한 대형 사고들을 보면요, 대한민국 안전불감증에 대한 현 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고였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의 1인당 보상 총액을 살펴보면 성수대교 붕괴 사고에서 2억 7000만 원, 대구 지하철 화재에서 최대 8억 8000만 원 그리고 이번 세월호 참사는 최대 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수습 과정에서 총 5548억 원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매번 사고가 발생하면 뒷수습하느라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썄요, 기본적으로 국가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제일의 정부가 또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보상관계도 결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병주 의원** 그래서 이런 대형 재난사고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민병주 의원** 그러면 이런 대형 재난사고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국무총리 이완구** 우선 기본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기관이 감독관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고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병주 의원** 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대형 재난사고는……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예방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좀 더 유념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고 후 수습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국가안전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우리 의원님 말씀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저는 총리로서 각 부처 장관들과 국민안전처장관이 협약서를 맺어 가지고 일차적으로 각 부처 장관의 책임하에 적어도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사후 수습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하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민병주 의원** 현장 중심의 사고예방 방지대책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주 의원** 공무원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시겠어요?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아시다시피 공무원연금이 현 제도로는, 우리 기대수명 60년대 52세에서 지금 현재 82세로, 30년 늘었습니다. 또 공무원 숫자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 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있다 또 미래 세대에 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공무원연금 문제를 지금 손을 대지 않으면 나중에 손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깊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고 헌신 속에서 이 나라가 그만큼 발전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없고, 특히 미래 세대에게 그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의 공감 속에 연금 문제는 개혁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병주 의원** 말을 하지 않아도 초가 계속 움직이는데 이거는 누가 하지요?

○**의장 정의화** 마이크 안 돼요?

○**민병주 의원** 아니요, 마이크 하기 전에 말을 하지 않고 답변을 듣는데도 초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의장 정의화** (옆의 직원들을 바라보며)

좀 신경 써서 하세요.

○**민병주 의원**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이렇게 명백한데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법론상에서 견해를 좀 달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시면 정부는 존중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주 의원** 일부 언론에서는 연금 개혁이 안 되는 이유가 야당이 29일 있을 재·보궐선거라든가 내년 총선의 표를 의식해서 공무원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언론이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야당 의원님들께서 그렇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병주 의원** 저도 이 일부 언론기사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구요. 경제정당, 서민정당을 자처하는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포기할 리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정치권에만 맡겨 두지 마시고, 국

회의원도 하셨고 지자체장도 하셨고 또 현재 공직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장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공무원의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국가 경제가 파탄의 길로 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리께서도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주 의원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지요. 헌법 제11조가 무엇이지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썽……

○민병주 의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입니다.

또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은 어떤 것일까요?

○국무총리 이완구 글썽요, 모든 선거권은 평등하게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민병주 의원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 등이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스크린을 한번 봐 주시지요.

총청권의 인구수는 호남보다 약 11만 명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의석은 5명이 적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알고 있습니다.

○민병주 의원 단순히 인구수만 비교했을 때 국회의원 수를 놓고 본다면 헌법가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썽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는 지금까지 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병주 의원 총리께서는 정치인이기도 하시니까 주민의 권리가 법에서 정한 대로 평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주 의원 이번 4·29 재·보궐선거가 네

곳이지요. 이 4·29 보궐선거가 왜 치러지게 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4·29 보궐선거는 선거법 위반에 따른 의원직 상실로 인해서 실시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병주 의원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 세 곳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의원직이 상실돼서 시작이 됐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건 물론이고요.

○민병주 의원 그런데 이 재·보궐선거의 직접 원인이 통진당에 있기는 하지만 새정치연합 또한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이 좋아서 연대지 민주당 후보 당선도 확실시되던 지역까지 통진당 후보에게 양보함으로써 이들이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물론 선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민병주 의원 국회의원 1명 선출하는 데 얼마가 드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민병주 의원 15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는 60억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게 되는 거지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야권연대로 선거기간 중 중도 사퇴하는 문제입니다. 야권연대라는 이유로 선거보조금을 대부분 소진한 후에 중도 사퇴함으로써 선거 때마다 ‘떡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게까지 표현하기가 좀 거북합니다.

○민병주 의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 이후에 사퇴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정당 및 선거권자의 추천을 통해 후보자로 등록하는 만큼 정당 추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권자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입법취지인데요.

이 제도와 관련하여 총리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제가 그 문제에 대

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민병주 의원** 얼마 전까지 원내대표도 하셨는데 생각을 안 해 보셨다니……

○**국무총리 이완구** 총리로서 답변하기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민병주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헌법은 ‘국가가 균형 있는 국토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요.

그런데 최근 정부가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자연보전권역 내에 있는 공장 증설, 규제 완화 등 각종 시책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수도권 규제마저 풀어 버리고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문제하고 국가 경쟁력이라는 문제가 서로 상충되는 듯하면서도 사실은 보완적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주 의원** 예,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주 의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4월이 무슨 달인지 알고 계시지요, 4월 달?

○**국무총리 이완구** 4월이 ‘잔인한 달’ 아닌가요?

(웃음소리)

죄송한데, 저한테는 잔인한 달로 느껴집니다.

○**민병주 의원** 4월은 ‘과학의 달’입니다.

총리께서 이번 과학의 달 행사에 직접 참석하신다고 들었는데……

○**국무총리 이완구** 예, 제가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주 의원** 과학계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구요.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 발전을 한 동력이 과학 기술 분야라고 하고 있지요. 이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이 국제적인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민병주 의원**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국제적 지원을 받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나라로 성장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과학 분야에서는 개도국을 지원하고 국제적 기술 표준화에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예.

○**민병주 의원** 특히 ICT 변화의 흐름이 빨라서 선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세계 표준화 기술의 선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우주나 원자력 분야는 기초 연구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경제 및 안보·외교의 수단이 되었고, 소수클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외교력이 필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잠깐 봐 주시겠어요?

국제사회에서 점점 커지는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 주재관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민병주 의원** 주요 선진국과 어깨를 겨누면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개도국으로 시장 진출, 증가하는 협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ICT 분야의 주재관을 확대하고 특임대사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충분히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민병주 의원** 충분히 검토만 하지 마시고 꼭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고 성완중 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남긴 인터뷰와 쪽지 한 장으로 온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새누리당 대표께서도 강조하셨듯이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

다. 검찰수사는 물론 필요한 경우 특검을 통해서라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공명정대한 수사,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온전하게 수행되도록 새누리당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은 경제활성화를 통해 서민생활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미래세대의 짐을 덜어 줘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가야 하는 이때 정치권이 정쟁으로 가까운 시간만 허비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또 우리의 미래와 후손을 위해서도 올바른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로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한 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저력과 경험이 다시 필요할 때입니다.

국가장래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 솔선수범하여 국가 개조를 위해 헌신하여 주십시오.

또 국회도 변해야 합니다. 이제 네 닷 내 닷 공방은 멈추고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통째로 뿌리 뽑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 함께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저 자신부터 법을 준수하고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민병주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천안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출석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천안을의 국회의원 박완주입니다.

먼저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님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합니다.

박근혜정부의 탄생에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기업가이자 정치인의 고백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단순 쪽지라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메시지입니다.

전·현직 대통령비서실장과 현직 총리, 지방자

치단체장과 여당 우수 의원들이 관련된 사상 유례없는 권력형 게이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연말 연초에는 국정 농단 문고리 3인방 문제로나라를 들썩이게 하더니 4월에는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3인방의 비리 의혹으로 국민들을 실망케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셨듯, 여당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 검찰이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초동수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28년 전 한 젊은 학생의 고문치사 사건이 검찰의 초동수사의 부실로 은폐되고 축소되는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물고문 중에 사망한 사건을 “‘탁’ 치니 ‘억’ 하고 숨졌다.”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발표로 국민들을 분노케 했고 연일 대학생들과 시민은 진상 규명과 직선제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전두환 군사정권은 이런 요구에 28년 전 바로 오늘, 직선제 헌법 개정 요구를 묵살하고 4·13 호헌조치를 했던 날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다 들통 난,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정권은 6월 항쟁으로 그 끝을 맞게 되고 마침내 민주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진실을 밝혀 달라며 죽음으로 항변하는 망자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박근혜정부 3년 차 최대 고비를 맞았고 이를 수사할 책무를 지닌 검찰도 최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려스럽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해 오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남북정상회담록 유출 사건,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 등에서 보여 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안타깝습니다.

실체적 진실만이 정답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 자는 시치미 떤다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면 더 큰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2015년 4월 13일 오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하루가 되기 위해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 사건의 처음과 끝을 반드시 명확히 규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성완중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이미 고인이 되셨습시다마는 저도 왜 이름을 남겨 놔 가지고 이렇게 곤혹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고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음을 택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렇게 모호하게 해 놓고 가니까 대단히 참 힘들어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마도 아까 오전에 답변해 올린 대로 원칙적인,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저의 말에 좀 섭섭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3월 12일 날 총리담화 이후에 3월 18일 날 압수수색영장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마 본인을 타겟으로 했다고 오해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고, 또 같은 충청권 인사로서 도와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섭섭함이 묻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주변을 통해서 제가 느끼고 있는 정도입니다.

○**박완주 의원** 그러면 성완중 리스트에 올라간 것 언제 아셨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박완주 의원** 그 전에 법무부장관이나 기타 다른 분한테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박완주 의원** 성완중 리스트가 발표되고 나서 비서실장, 당 대표, 총리 이렇게 만나신 적은 없으신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런 것 없습니다.

○**박완주 의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친하지도 않고 돈도 안 받았는데 왜 메모에 총리 이름이 거명됐는지, 조금 전의 답변으로 말씀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인께서 주도하신 2000년 충청포럼에 가입하지 않은 건 의원님을 비롯한 충청권 국회의원님들이 다 아십니다.

2007년 충청남도 도청과 2년 동안 절친, 아주 심한 송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저는 아시다시피…… 의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1년 동안 암투병 생활을 해서 대선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보궐선거로 제가 국회 19대에 들어온 이후에 같은 정당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총리가 돼서 3월 12일 날 총리담화를 발표했습니다. 3월 18일 날 경남기업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3월 22일 날 고인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사정 말씀을 하셔서 저는 고인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당당하게 받는 것이 낫겠다. 동향으로서 도와주지 못한 걸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3월 22일 이후 고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저하고 접촉은 없었습니다.

○**박완주 의원** 오전에도 정상적인 후원금 또는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은 안 받으셨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혹시 기억을 못 하는 건지……

○**국무총리 이완구** 아닙니다.

○**박완주 의원** 진짜 안 받은 건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완구** 이 문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중앙선관위에 제가 2006년 도지사 출마했을 때의 기록과 2013, 2014년도 국회의원으로서의 후원금이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관되어 있고 저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하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박완주 의원** 이후 수사 과정에서 총리께서 단 1원이라도 받았다는 정황이 나올 경우 책임지는 자세 보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당연한 일입니다. 예, 당연합니다.

○**박완주 의원**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도 성 회장님의 구명 전화는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고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또한 성 회장과 죽기 이틀 전까지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했다고 하는 말씀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마 전방위적으로 구명활동을 한 것 같은데, 방금 총리께서도 성완중 전 회장님과는 3월 22일에 전화를 했는데, 그 이후 진짜 문자나 전화받으신 적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이 질의가 끝나면 의원님께 제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완주 의원** 그것은 본 의원이 아니고 검찰에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아, 그것은 물론이고요. 의원님께서서 궁금해 하신다면 막바로, 제가 쓰는 스마트폰은 1대입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완주 의원 좋습니다.

JP, 홍문표·김태흠 의원으로부터 성 전 회장님 도와 달라는 전화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동료 의원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완주 의원 이것은 보도에 나온, 오늘 아침 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국무총리 이완구 글썽요, 어쨌든 간에 동료 국회의원 이름을 제가 여기서 거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완주 의원 도와 달라고 하는 구명 전화는, 여러 통의 전화는 받은 게 사실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여야…… 전화도 그렇고 또 구두로도 그렇고 여야……

○박완주 의원 여야 의원들이……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박완주 의원 전·현직 의원들이……

○국무총리 이완구 충청권 의원님들 몇 분께……

○박완주 의원 전화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전화를 받은 적이 있고 또 만난 적도 있습니다. 저한테 구두로 한 분 중에는 야당 의원님도 계십니다.

○박완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찰 조사에 가서 충분히 밝히셨으면 좋겠고요.

오전 내내 논쟁이 됐던 일요일 날, 아마 일요일 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토요일 날 서태안 지역의 의원들하고 15통 정도의 통화를 했는데, 정말 뭐가 그렇게 궁금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에 보면 ‘이완구를…… 이완구를……’ 제하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성완중 회장께서 태안군 군 의장이 된 이……

○박완주 의원 용희.

○국무총리 이완구 이용희 전 의장입니다—거기 부의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 의장입니다—의장님과 김 모 의원님과 함께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 말씀을 하셨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에.

마침 이용희 군 의장은 제가 도지사 할 당시에 태안군 의장을 했기 때문에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입니다. 제가 아마 모르는 분 같았으면 전화번호도 모를 뿐만 아니라 전화를 안 했을 텐데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여성분인데요—제가 아침에 일찍 전화를 드렸습니다. 드려서 한 서너 통 했는데 그 이후에 전화가 자꾸 끊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저한테 대단히 미안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런가 하면 제 이름을 내가지고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나라의 국무총리입니다. 이 리스트로 인해서 지금 국민들께서 대단히 혼란스러워하십니다. 제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말씀을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왜냐하면 저하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그랬더니 그분이, 이용희 의장님이 김 모 의원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는 김 모 의원님 이름도 몰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전화번호도 모르고 김 모 의원님 이름도 모르고, 김 모 의원께 전화를 드렸더니 서둘러서, 굉장히 당혹해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하고는 한 통화의 전화를 한 것 같고 이용희 의원님과과는 서너 통 전화를 한 연후에 저도 바빠서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한 게 신호가 간 게 12통인가 얼마인가 되고 실제 통화한 것은 서너 통 정도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총리가 전화한 것이 적절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용희 군 의장과는 말씀 올린 대로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고 또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라도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정치인으로서 저의 이름이 거명이 됐는데 사정을 알아본다는 것은 저는 자연스럽다고 판단을 그 당시에는 했기 때문에 전화를 드린 것이 다른 의도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완주 의원 그래서 그 친분관계에 있는 이용희 의원님하고 12통 중에 서너 통…… 그래서 어떤 내용을 물어보셨어요, 그것도 이른 아침에?

○국무총리 이완구 아, 이른 아침에……

○박완주 의원 그리고 잘 모르시는 김진권 의원님한테도 3통의 전화를 시도해서 1통 하셨다는데 잘 모르시는 분인데 뭘 그렇게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국무총리 이완구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니……

○박완주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연한 질문을 뭘 하셨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침에 일어나니, 중앙일보 보니 아침에 제 이름이 있길래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게 마침 중앙일보 기사에 이용희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어서 ‘아, 이용희 의장님 내가 잘 알지’ 그래서 아침 7시쯤인가 6시몇 분경에, 그 시간에도 전화할 수 있는 정도의 친분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드려서 “의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했더니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우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당연히. 잘 줌, 제가 내려가지 못하니 잘 줌 상을 치러 주시고 여러 가지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렸고, 두 번째는 ‘이완구를, 이완구를 하는 의미가 도대체 뭘니까?’ 제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혼란해 하시니까?

○**박완주 의원** 그런데 총리님, 어쨌든 그 전화를 받은 당사자들은 외압으로 느꼈고요, 언론에 대해서 ‘이 총리가 대화 내용을 대단히 상당히 궁금해 하더라’ 그리고 심지어는 ‘검찰에서 묻는다면 얼마든지 가서 얘기하겠지만 총리에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기자 간담회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당사자 두 의원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도대체 이른 일요일 아침에 어떤……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일요일에……

토요일 아침일 것입니다.

○**박완주 의원** 아, 토요일에……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에 관한 기사를 보고도, 또 그 말씀하신 분이 저하고 친분 관계가……

○**박완주 의원** 그러면 일일이, 나온 기사에 대해서 일일이 그렇게 다 확인하고 응대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사안의 성격상, 사안의 성격이 대단히 중대한……

○**박완주 의원** 이미 총리께서는 그 리스트에, 56자 중에 거명이 돼 있는 당사자인데……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박완주 의원** 그런 부분이, 반드시 꼭 내 이름이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확인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같으면 이 중대한 사건에 의원님 이름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 보

도된 사람이 의원님과 친분이 있다면 전화 안 하시겠습니까?

○**박완주 의원** 직접 하지 않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글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줌……

○**박완주 의원** 적절하지 않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박완주 의원**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줌 견해를 달리합니다마는 제가 줌 생각이……

○**박완주 의원** 아니, 직접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글썄요,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에이, 그거 상식이지……」 하는 의원 있음)

○**박완주 의원** 답변하시는 총리가 인정하는데 왜들 그렇게 말씀이 많으세요?

다음 “성완중 회장과는 같은 충청 출신이라는 점 외에는 인연이 없다.” 이렇게 답변한 것 맞으시지요?

그런데 청문회 국면에서 여론이 좋지 않을 때 충청포럼에 지원 요청했던 적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던 사실 혹시 아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마는 누누이 자꾸 강조를 합니다마는 저는…… 의원님도 충청도 국회의원 아니십니까? 충청포럼에 저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았습니. 2007년도에……

○**박완주 의원** 아니, 참여가 아니고 이번 청문회 국면에서 여론이 안 좋아 충청포럼에 지원 요청하신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충청포럼에 누가 관여하는지조차를 모릅니다. 어떤 인사도, 충청포럼 인사와 접촉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충청포럼이 어떤 사람이 간부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누가 지어냈는지 모르지만 충청포럼의 인사가 어떤 사람이 간부며 어떤 사람이 임원인지를 모릅니다.

○**박완주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쭙 볼게요.

○**국무총리 이완구** 한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박완주 의원 잠깐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완주 의원 2월 국회에도 제가 이 구호를 여쭙 봤는데 ‘충청 총리 낙마되면, 다음 총선 대선 두고 보자’ 이런 플래카드 충청포럼이 만들었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보에 의하면 현수막 1640여 개가 걸렸는데……

○국무총리 이완구 얼마가 걸렸다고, 얼마가 걸려……

○박완주 의원 그중 455장 찍은 광고사에 3000만 원 지급한 곳이 충청포럼이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충청포럼에, 의원님도 천안이 지역구 아니십니까? 충청포럼 인사를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 플래카드와 관련해서 한 번도 누구한테 얘기 들은 바도 없고……

○박완주 의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지금도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께서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천안지구에서 누가 시켰습니까?

○박완주 의원 그것을 이제 밝혀야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의원님이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역구……

○박완주 의원 그것을 저는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박완주 의원 당사자들은 아니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밝히십시오.

○박완주 의원 그 이름을 걸은 당사자들은 자기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역구가 천안이시니까 밝히십시오.

○박완주 의원 검찰이 밝혀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의원님께서 고발을 하든지 하시면 될 게 아닙니까……

○박완주 의원 그래서 지금 충청도에서는 어떤 말이 나도느냐 하면요, 충청 총리 만들어 줘더니

충청 출신 기업인·정치인 홀대했다는 의견 이런 이야기들이 팽배한데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충청 총리하고 이 문제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국무총리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정을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의원님이 아까 명단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고인과 그렇게 관련 있다면 왜 수사를 해서 타깃으로 삼았겠습니까? 법과 원칙에 의해서 국무총리는 국정을 수행하는 것뿐입니다.

○박완주 의원 혹시 반기문 총장, 유엔 총장님 동생이 경남기업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지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박완주 의원 홍준표 도지사에게 성 회장의 돈을 전달했다는 윤 모 씨가 경남기업에 근무한 사실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모릅니다.

○박완주 의원 그것은 지면에 나왔는데 그것은 확인이 안 되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경남기업에 있는 인물을 전혀 모릅니다.

○박완주 의원 그래서 혹자는 성 전 회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신 출마와 관련해 적극적인 역할을 자청하면서 정권의 표적이 됐다 내지는 이완구 총리한테 찍혔다 이런 말이 회자되는 이야기를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차기 대권 문제에 충청 주자를 놓고 반기문 총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완구 총리가 반기문 총장을 지지하는 성완중 고인을 견제했다는 그런 루머 아닌 루머가 있는 것으로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박완주 의원 들으시기는 했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하여튼 들었습니다마는 말씀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대권에 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대권에 관심 있는 사람도 아닌데 하물며 그런 엄청난 얘기들을 아무리 음해성이라 하더라도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권에 관심이 없습니다.

○박완주 의원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성역 없는 수사라는 것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

여야 할 것 같은데요. ‘성역 없는’ 그러니까 모두가, 누구든지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박완주 의원 대통령도 포함되는 말씀이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좀 말씀이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박완주 의원 아니, 지금 방금 모두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무총리 이완구 말씀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치십니다.

○박완주 의원 입장이 없으신 건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답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수사의 대상이, 수사 대상에……

○박완주 의원 그 누구든지에 대통령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제한을 두지 말고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 주십시오.

○박완주 의원 예,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완중 전 회장이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 2007년 7억 원을 줬다는 메모가 나왔고 이에 더해 2012년 대선 후 박근혜 대통령이 성 전 회장에게 고맙다는 전화도 했다는 이런 제보도 또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혹여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글썽요, 가정을 상정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박완주 의원 그러면 성 회장님이, 오후에도 질의가 있었는데 ‘서울 평창동에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님 댁에 찾아갔다’ 이런 보도자료가 오후에 나왔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알지 못합니다.

○박완주 의원 바쁘셔 가지고 오후에 언론……

이런 이야기를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보도에 대해서?

○국무총리 이완구 예, 여기 죽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박완주 의원 망자가 자살하기 직전에 혹여 김기춘 실장을 찾아갔다면 왜 찾아갔는지 이 부분 또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성 회장은 ‘억울하다’입니다.

총리 들어가시고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많은 의원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성완중 리스트에 등장한 인물들이 만만치 않은 분들이어 가지고 과연 검찰이 제대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마지막 질문자로서 여쭙겠습니다.

철저한 수사, 의혹 없는 수사, 하실 수 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대한민국 검찰은 범죄가 있으면 어디까지든지 추적해서 수사하고 의법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의원 국민들은 당사자는 고인이 됐고 연루자들은 증언 외에 증거가 없다면 검찰 수사 결과가 ‘혐의 없음’이 아니라 ‘확인 불가’가 나올까 우려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성 회장이 작고하셔서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은 수사에 굉장히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있는 제반 참고인들이나 그동안 압수수색한 자료들이나 또 앞으로 검토하는 자료들을 통해서 범죄 입증을 위해서 최선을 검찰이 다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완주 의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검찰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경남기업에서 370여 차례에 걸쳐 현금 인출된 32억 원의 용처를 추적 중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관련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 그 자금 용처가 정치권에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됐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 수사가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수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철저하게 모든 비리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고 결과를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 궁금한 것은 이런 사실이 왜 언론에 먼저 공표가 되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어떤 사실을 말씀하시는……

○박완주 의원 방금 제가 적시한 32억, 370회, 정치권 정황……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 32억이 뭘 말씀하시

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비리 규모는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큼니다. 그런 부분 전반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 성 회장님 유품과 관련해서 한번 여쭙 보겠습니다.

성 회장님의 유품을 유가족에게 모두 보여 주지 않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한번 화면 보시면 거기에 보면 메모도 있고요. 핸드폰도 있는데, 그리고 메모에 대해서는 다음날 모 신문에서 보도되자 오전 중에 발표가 됐고요. 핸드폰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2개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이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다 유가족한테 돌려주지 않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건은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수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메모지나 또 휴대폰 등 이런 유류물들은 대부분 범죄 증거입니다. 범죄 증거이기 때문에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압수된 물건들 중에 일차적인 수사 자료로 자료 전환이 된 자료들은 적절한 때에 유족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돌려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개인의 물건이지만 지금 단계는 압수물로 형사소송법상 진행되고 있는 점을 좀 같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완주 의원 두 번째, 휴대전화 2개에 대해서 전화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등 다 분석이 끝나셨나요? 오전 중에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 디지털 포렌식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났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고 지금 포렌식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 그런데 언론보도에는 숨지기 전날까지 8일까지 20일간에 대한 문자나 전화 부분들이 남아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 포렌식 작업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의 범위를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 그래서 또 하나는 국민들이 지난

달 18일 석유공사하고 경남기업 압수수색하면서 자원외교 수사 공식화했는데 이 자원비리 파헤친 첫 1호를 성공불 용자자금 불법 의혹에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불법 사실이 밝혀졌나요, 성공불 용자 관련해서?

○법무부장관 황교안 물론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 회장이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조작해서 기업의 자금들을 분식회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공불 용자금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입증이 거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수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 나머지 성공불 용자를 해 간 기업은 137개 사업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상황이 없습니까? 사실은 경남기업은 성공불 용자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양 그리고 많은 사업을 한 기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들여다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 검찰이 자원개발 관련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자원개발 관련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개발 사업을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자원개발 사업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중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검찰에서 그 부분들을 차근차근 내사하고 확인하고 있는 과정 중에 비리가 포착된 기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내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남기업이 1호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1호 2호 이런 순서를 정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혹을 가지고 내사를 한 결과 수사의 단서가 포착이 돼서 수사를 한 것이고 이곳 말고도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몇 개 내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자원개발 비리 전반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비리 의혹이 포착된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완주 의원 최근에 성공불 용자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에서, 장관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300억대 인하해 준 것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고 검찰에 고발한 것이 부분도 정확하게 사실은 금액이 간단치 않기 때문에 내사 내지는 조사를 하고 있나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수사 의뢰가……

○박완주 의원 됐습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감사원으로부터 된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내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로 또 진행을 할 것입니다. 다만 무엇에 대해서 고발이 됐고 무엇에 대해서 수사 의뢰가 됐고 그 점에 관해서 우리가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완주 의원 고맙습니다.

총리님께서 다시 한 번 나와 주십시오.

주제를 바꿔서요.

지난 금요일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16일부터 27일까지 박근혜 대통령 중남미 순방 일정을 발표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 4월 16일이 어떤 날인지도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 그 법 여야가 합의해서, 그 당시 원내대표셨을 때 여야 합의로 만든 법이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습니다.

○박완주 의원 총리 되시면 쓴소리, 제대로 모시겠다는 약속도 하신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 소리 했습니다.

○박완주 의원 그날은 최소한 국민과 함께 애도 하고 하면 더욱더 좋은 날이 아닐까요? 반드시 그날 순방 나가야겠습니까? 나가면 안 된다는 제안 하신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이것은 1월 달에 상대국과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 이 사건은 1년 전에 발생한 거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양해가 안 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알기로는 이날 출발을 하십니까라는 모든 의미 있는 행사를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 그리고 국회에 있을 때 여야 합의로 이런 법 만들었는데 시행령 반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관회의를, 지난 9일 날 시행령 입법예고가 끝났는데 이미 연기해서 유가족들 의견이나 또 각계각층 의견을 좀 더 수렴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박완주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집권 여당은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정권 담당자로 지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촉구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정의화 박완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출석 의원(276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권영희	김경협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중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중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개의 시 재석 의원(171인)

강길부	강동원	강석훈	강은희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용남	김우남	김을동	김정록
김제식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희국	나경원	남인순
노영민	노용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성호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성범	신정훈	심상정
심재권	심학봉	안규백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영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미경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장우	이재오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조경태	조원진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재성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속개 시 재석 의원(87인)

강기정	강동원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광림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훈	김성곤
김영우	김용남	김재원	김제식
김종훈	김춘진	김태원	김한길
김한표	김희국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병석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지원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영교	설훈	송영근	신동우
심재권	심학봉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유승민	유승희	유의동
윤명희	윤호중	이강후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언주	이완구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장우	이종배	이종진	이진복
이학영	이한성	임수경	전순옥
전정희	정갑윤	정미경	정성호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홍문종
홍영표	홍익표	홍철호	

○산회 시 재석 의원(75인)

강길부	강은희	경대수	길정우
김관영	김도읍	김동철	김무성
김민기	김영록	김용남	김제남
김제식	김춘진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류성걸	류지영
민병주	민홍철	박남춘	박대출
박완주	박윤옥	박인숙	박지원
박홍근	배덕광	백재현	부좌현
서영교	송영근	신성범	신정훈
심상정	심학봉	안규백	염동열
우윤근	원혜영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인태	은수미	이에리사
이완구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종배	이종훈
이진복	이채익	이학영	이현재
임수경	전순옥	전정희	정의화
정호준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최민희	최재성	한기호	함진규
홍문표	홍의락	황인자	

○청가 의원(7인)

김기선	김희정	배재정	송광호
유일호	장하나	최경환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박형준
입법차장	구기성
의사국장	장대섭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이완구
통일부장관	홍용표
법무부장관	황교안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출석 정부위원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	-----

【보고사항】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기획재정	박덕흠	김태흠	새누리당	2015. 4. 10
국토교통	김태흠	박덕흠		

○의안 제출

보호수용법안

(2015. 4. 9 정부 제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5. 4. 9 이찬열·김경협·배재정·전병헌·이개호·최동익·안규백·한정애·김윤덕·변재일·박남춘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

(2015. 4. 9 임수경·김영록·조정식·박수현·도종환·김성주·최규성·정성호·최민희·박원석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2015. 4. 9 장하나·은수미·이개호·조정식·정청래·박남춘·우원식·이인영·김우남·이석현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2015. 4. 9 장하나·은수미·이개호·조정식·정청래·박남춘·이인영·우원식·김우남·이석현 의원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15. 4. 9 심상정·김광진·김제남·박광운·박원석·서기호·이인영·장하나·정진후·한정애·홍영표 의원 발의)

이상 4건 4월 1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일본의 독도 도발 중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2015. 4. 9 안민석 · 신계륜 · 조정식 · 이개호 · 김영환 · 김영록 · 이미경 · 노웅래 · 배재정 · 전순옥 · 박홍근 · 은수미 · 이우현 · 김태호 · 안규백 · 김태원 · 김도읍 · 박수현 · 이찬열 · 강창일 · 신정훈 · 이종걸 · 김현 · 장병완 · 강기정 · 조경태 · 윤관석 · 진성준 · 원유철 · 박지원 · 홍종학 · 유승우 · 부좌현 · 이윤석 · 최규성 · 김을동 · 최재성 · 우원식 · 박광온 · 민병두 · 김상희 · 원혜영 · 서상기 · 정세균 · 박주선 · 변재일 · 정호준 · 박혜자 · 김민기 · 안홍준 · 서영교 · 박남춘 · 김윤덕 · 이원욱 · 박병석 · 염동열 · 조해진 · 홍의락 · 김용익 · 김광진 · 이춘석 · 도종환 · 황주홍 · 유성엽 · 신경민 · 백균기 · 김태년 · 정청래 · 강동원 · 심상정 · 정진후 · 김승남 · 진선미 · 서기호 · 박원석 · 한정애 · 이인영 · 서용교 · 유승희 · 권垠希 · 한명숙 · 임수경 · 김성곤 · 정희수 · 김우남 · 김춘진 · 설훈 의원 발의)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

(2015. 4. 9 이원욱 · 김경협 · 이개호 · 한정애 · 민홍철 · 홍익표 · 김기준 · 심재권 · 조정식 · 부좌현 · 노웅래 · 이재오 · 유성엽 · 도종환 · 최민희 · 강동원 · 안민석 · 임내현 · 이미경 · 배재정 · 김윤덕 · 김상희 · 강창일 · 한명숙 · 최규성 · 박광온 · 홍종학 · 이종걸 · 주승용 · 전정희 · 박홍근 · 오영식 · 박지원 · 노영민 · 정세균 · 박성호 · 백재현 · 최재성 · 이우현 · 정청래 · 신정훈 · 이해찬 · 서영교 · 김민기 · 강기정 · 박완주 · 진선미 · 이목희 · 정호준 · 설훈 · 이석현 · 박기춘 의원 발의)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및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

(2015. 4. 9 심재권 · 이개호 · 김민기 · 김윤덕 · 한정애 · 황주홍 · 안규백 · 조정식 · 원혜영 · 김용익 · 이해찬 · 노웅래 · 박병석 · 최규성 · 변재일 · 진선미 · 정진후 · 인재근 · 박주선 · 김성곤 · 정세균 · 신경민 · 이인영 · 우상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4. 9 정부 제출)

4월 10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2015. 4. 9 김현미 · 윤호중 · 정세균 · 김관영 · 신경민 · 안규백 · 최재성 · 박영선 · 박원석 · 박광온 의원 발의)

4월 1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15. 4. 9 민홍철 · 조경태 · 이찬열 · 원혜영 · 부좌현 · 박주선 · 문희상 · 신정훈 · 이개호 · 강동원 · 김성곤 의원 발의)

4월 1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015. 4. 9 심재권 · 김윤덕 · 한정애 · 유성엽 · 안규백 · 조정식 · 원혜영 · 김용익 · 김광진 · 박주선 · 이해찬 · 김현 · 최규성 · 진선미 · 김성곤 · 정세균 · 신경민 의원 발의)

4월 10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

(2015. 4. 10 배재정 · 이개호 · 김용익 · 정진후 · 정청래 · 김태년 · 안민석 · 최동익 · 조정식 · 한정애 · 양승조 · 이목희 · 원혜영 · 김기식 · 이미경 · 김관영 · 김광진 의원 발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

(2015. 4. 10 김장실 · 서청원 · 이우현 · 민홍철 · 서상기 · 박명재 · 박인숙 · 이운룡 · 이종배 · 김장민 · 서용교 의원 발의)

이상 2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하겠음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추모사업에 관한 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5. 4. 10 강창일 · 주승용 · 이원욱 · 이종걸 · 이개호 · 이상직 · 윤관석 · 부좌현 · 박민수 · 황주홍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5. 4. 10 박남춘 · 김현 · 안민석 · 유대운 · 이개호 · 부좌현 · 이찬열 · 인재근 · 진선미 · 김광진 · 김성곤 의원 발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2015. 4. 10 조원진 · 이한성 · 김동철 · 홍지만 · 김제식 · 박민식 · 권垠希 · 이장우 · 조명철 ·

김기선 · 정수성 · 이종배 · 문대성 의원 발의)
이상 3건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5. 4. 10 이찬열 · 배재정 · 전순옥 · 전병헌 ·
변재일 · 양승조 · 이목희 · 황주홍 · 강동원 ·
김광진 의원 발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2015. 4. 10 김성태 · 이재영 · 유의동 · 김제식 ·
김태원 · 심학봉 · 홍철호 · 이우현 · 이장우 ·
강석호 · 이철우 의원 발의)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

(2015. 4. 10 이장우 · 이이재 · 박성호 · 김도읍 ·
박덕흠 · 이종배 · 박상은 · 이재영 · 김성태 ·
이우현 · 김태원 의원 발의)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5. 4. 10 박광온 · 이원욱 · 이목희 · 심상정 ·
김관영 · 김광진 · 김성곤 · 이개호 · 최재성 ·
박남춘 · 부좌현 · 김기식 · 한정애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2015. 4. 10 이목희 · 김관영 · 한명숙 · 최규성 ·
박광온 · 진성준 · 정호준 · 홍영표 · 이찬열 ·
배재정 · 최원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2015. 4. 10 김성태 · 김용태 · 이재영 · 유의동 ·
심학봉 · 홍철호 · 김태원 · 이우현 · 이장우 ·
강석호 · 안효대 · 이철우 의원 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2015. 4. 10 유성엽 · 이춘석 · 황주홍 · 박민수 ·
김승남 · 강동원 · 변재일 · 김성곤 · 김상희 ·
이찬열 · 안민석 · 설훈 의원 발의)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2015. 4. 10 유성엽 · 이춘석 · 황주홍 · 박민수 ·
김승남 · 강동원 · 변재일 · 김성곤 · 김윤덕 ·
이찬열 · 안민석 · 설훈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2015. 4. 10 이목희 · 박광온 · 한정애 · 양승조 ·
최규성 · 한명숙 · 진성준 · 정호준 · 홍영표 ·

이찬열 의원 발의)

이상 3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하겠음

**성차별 ·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5. 4. 10 유승희 · 이개호 · 정청래 · 인재근 ·
김현 · 유은혜 · 이해찬 · 주승용 · 정호준 ·
박혜자 · 윤후덕 · 서영교 · 박남춘 · 강기정 ·
전순옥 · 최원식 · 양승조 · 최재성 · 백재현 ·
박완주 · 김현미 · 이상호 · 문희상 · 김태년 ·
황주홍 · 최규성 · 신계륜 · 권은희 · 최민희 ·
김승남 · 장하나 · 노영민 · 김영록 · 추미애 ·
임수경 · 은수미 · 김성주 · 안규백 · 오제세 ·
오영식 · 우윤근 · 이상민 · 김동철 · 김영주 ·
설훈 의원 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서면질문서 제출

대정부질문 정부조치에 관한 질문서(3건)

(이상 3건 2015. 4. 9 윤후덕 의원 제출)

○보고서 제출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처리보고서

(2015. 4. 9 정부 제출)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부록으로 보존함)

2014년도 언론중재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2015. 4. 9 언론중재위원회 제출)

4월 1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송부